

# 동아시아 다중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

박은주



# 동아시아 다중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

연구책임자 : 박은주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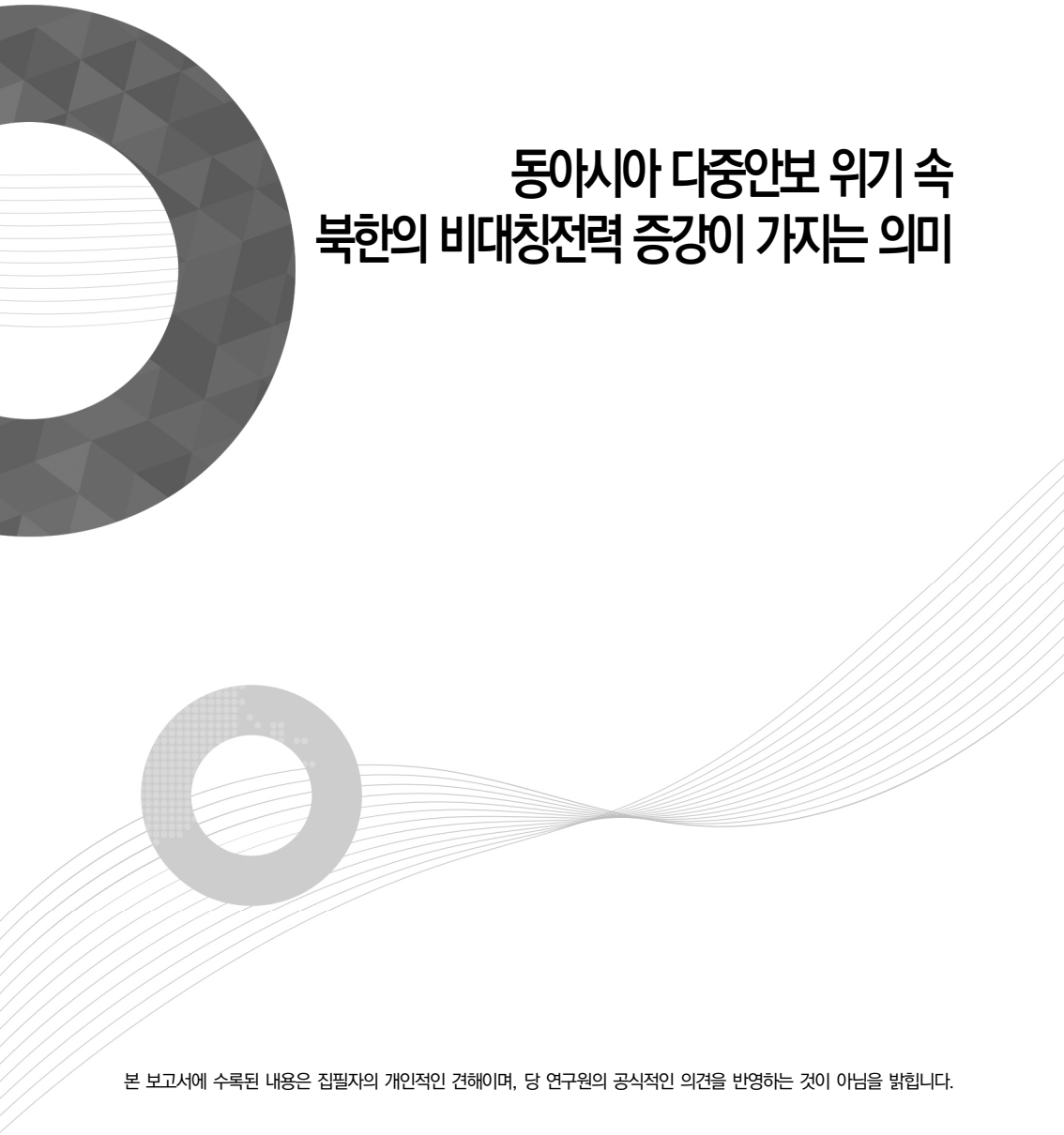
## 동아시아 다중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

KINU 정책연구시리즈 22-02

|        |                                                             |
|--------|-------------------------------------------------------------|
| 발행일    | 2023년 4월 17일                                                |
| 저자     | 박은주                                                         |
| 발행인    | 고유환                                                         |
| 발행처    | 통일연구원                                                       |
| 편집인    | 평화연구실장                                                      |
| 등록     | 제2-02361호 (97.4.23)                                         |
| 주소     |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
| 전화     | (대표) 02-2023-8000<br>(FAX) 02-2023-8296                     |
| 홈페이지   | <a href="https://www.kinu.or.kr">https://www.kinu.or.kr</a> |
| 기획·디자인 | 세일포커스 (02-2275-6894)                                        |
| 인쇄처    | 명문인쇄공사 (02-2079-9200)                                       |
| ISBN   | 979-11-6589-128-2 93340                                     |
| 가격     | 비매품                                                         |

© 통일연구원, 202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 동아시아 다중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차례

|                                        |           |
|----------------------------------------|-----------|
| 요약 .....                               | 8         |
| <b>I. 들어가며 .....</b>                   | <b>11</b> |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 13        |
| 2. 연구 방법 및 내용 .....                    | 17        |
| <b>II. 이론적 배경 .....</b>                | <b>19</b> |
| 1. 안보 위기의 개념 .....                     | 21        |
| 2. 비대칭전력의 개념 및 특징 .....                | 28        |
| <b>III. 동아시아 안보 위기의 다중화(多重化) .....</b> | <b>41</b> |
| 1. 동아시아 안보 위기의 현재 .....                | 43        |
| 2. 동아시아 다중안보 위기의 분화(噴火) 가능성 .....      | 60        |
| <b>IV. 북한의 비대칭전력 강화 배경 및 현황 .....</b>  | <b>67</b> |
| 1. 북한의 비대칭전력 강화 배경 .....               | 69        |
| 2. 김정은 시대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 정책 .....        | 74        |
| 3. 유형별 비대칭전력 현황 및 분석 .....             | 82        |

|                                      |     |
|--------------------------------------|-----|
| V.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함의와 대응 방안 ..... | 103 |
| 1.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함의 .....        | 105 |
| 2. 북한 비대칭전력 증강에 따른 대응 방안 .....       | 108 |
| 참고문헌 .....                           | 113 |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 120 |

## 표 차 례

|                                             |    |
|---------------------------------------------|----|
| 〈표 II-1〉 포괄적 안보 관점에서의 국가안보 및 국가 위기 유형 ..... | 23 |
| 〈표 II-2〉 금융위기 회복 기간 및 GDP 손실 추이 .....       | 26 |
| 〈표 II-3〉 비대칭 전략의 유형화 .....                  | 36 |
| 〈표 III-1〉 미국과 중국의 아·태지역 패권 경쟁 양상 .....      | 46 |
| 〈표 III-2〉 연대별·유형별 국지도발 세부 현황 .....          | 51 |
| 〈표 IV-1〉 북한 보유 추정 화학무기 .....                | 84 |
| 〈표 IV-2〉 화학무기의 영향 .....                     | 86 |
| 〈표 IV-3〉 복합 보유 화학무기 운반수단 .....              | 87 |
| 〈표 IV-4〉 북한 보유 생물학작용제 13종 .....             | 89 |
| 〈표 IV-5〉 북한 무기화 예상 작용제 5종의 특징 .....         | 90 |
| 〈표 IV-6〉 북한군 특수작전부대 지역별 투입 규모 .....         | 93 |
| 〈표 IV-7〉 북한군 특수작전부대 타격 목표별 투입 규모 .....      | 94 |
| 〈표 IV-8〉 연도별, 유형별 침투 현황 .....               | 95 |





## 그림 차례

# 동아시아 다중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

|                                    |    |
|------------------------------------|----|
| 〈그림 II-1〉 팻 테일 분포와 정규분포 비교 .....   | 27 |
| 〈그림 III-1〉 북한 미사일 도발 세부 현황 .....   | 53 |
| 〈그림 IV-1〉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 ..... | 76 |
| 〈그림 IV-2〉 북한 사이버전 조직 체계 .....      | 98 |

2022년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대한민국 영공을 침입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7년 5월 이후 5년 만에 북한 무인기가 다시 대한민국을 넘어왔지만,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하면서 안보 불안이 가중되었다. 북한의 무인기는 대한민국 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공무기들의 유효 사거리나 탐지 범위를 벗어나기 쉬워 대응 자체가 어렵다. 소위 말해, 가성비 좋은 비대칭전력이다. 향후 북한이 반복적으로 무인기 침투를 시도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 불안은 폭증할 수밖에 없다. 이뿐 아니라 북한은 63회에 달하는 미사일을 일방적으로 발사하며, 군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자본 제약을 돌파하고, 체제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비대칭전력 증강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이해한 듯하다.

현재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요약하면, ‘불안정성 강화’와 ‘복합성의 심화’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불안하게 조성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부수적 피해도 유발된다. 미국의 중국 견제도 현재 진행형이라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경쟁 등이 심화할 우려가 크다. 또 동아시아 안보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북·중·러는 ‘신 밀월(新 蜜月)관계’를 형성하며 상호 협력적 태도를 보인다. 현재 동아시아는 군사 분야는 물론 경제, 에너지 등 비군사 분야까지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듯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다중화된 안보 위기의 발생은 대한민국 정부의 전략적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동하여 북한의 비대칭전력 강화가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북한이 체제 생존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비대칭전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비대칭전력 강화가 동아시아 안보 불안정성 가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북한의 비대칭전력 강화가 동아시아 안보 불안정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면, 다중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국가안보 위기의 개념 및 유형을 설명하고, 다중안보 위기의 개념 및 특성을 제시하고, 비대칭 및 비대칭전력의 개념을 정리한 후 비대칭전력의 종류와 유형 분류, 비대칭전력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이어 동아시아 다중안보 위기 시대가 도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동아시아 정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동아시아 다중안보 위기의 분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또 본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분석도 시도한다. 가장 먼저 북한의 비대칭전력 강화 배경을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김정은 시대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는지를 파악한 뒤 비대칭전력의 유형별 현황 파악 및 분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는 비대칭전력 중 다수 연구가 진행된 핵무기와 미사일을 논외로 하고 화학무기 및 생물학무기, 특수 작전부대, 사이버공격 역량, 암호화폐 탈취 역량 등에 국한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함의를 제시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간략하게 서술한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비대칭전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함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함의를 분석하는 일은 전략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다. 본 보고서는 2022년 10월~12월까지 약 3개월의 짧은 기간 진행된 연구

## 요 약

라 세부 분석은 다소 부족할지 모르나, 북한 비대칭전력 현황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환기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향후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및 군사전략 수립에 단초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북한, 비대칭전력, 생물화학무기, 특수작전부대, 사이버공격, 다중안보 위기

# I. 들어가며



## 1. 연구 배경 및 목적

지난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을 넘어 대한민국 영공에 침입한 사건이 벌어졌다. 강화도 인근에서 교란 활동을 하던 4대는 우리 군 레이더에서 신호가 사라져 행방을 알 수 없었고, 나머지 1대는 약 1시간 이상 서울 시내를 휘젓다 북한으로 되돌아가기까지 하였다.<sup>1)</sup> 북한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사건은 2017년 5월 이후 5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북한의 무인기는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공무기들의 유효 사거리 혹은 탐지 범위를 벗어나기 쉬워 대응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북한이 무인기 침투와 같은 비정형화된 공격 형태를 보이는 무기체계를 반복적으로 활용한다면, 대한민국으로서는 군 전력의 비대칭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북한은 2022년 가장 많은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3월 21일 북한 평안남도 온천군 일대에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3월 25일에는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비행장에서 KN-23 대형화 개량형 미사일 2발을 발사하였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5월 12일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발 발사하였다. 2022년 12월 17일 기준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벌써 63번째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으며, 이 기간 미사일 발사에 사용된 비용은 최대 5억 3천만 달러(한화 약 6,890억 원)로 추산된다.<sup>2)</sup>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렵

---

1) 국방부, “북 무인기침투 관련 합동참모본부 브리핑,” 『KTV 국민방송』, 2022.12.26., <[https://www.ktv.go.kr/news/latest/view?content\\_id=665757](https://www.ktv.go.kr/news/latest/view?content_id=665757)> (검색일: 2022.12.27.).

2) “북한, 올해 미사일 발사에만 7천억 원…내년에는 핵실험?” 『MBC』, 2022.12.17.,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7117\\_35666.html](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7117_35666.html)> (검색일: 2022.12.23.).

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북한은 자본 제약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비대칭전력의 증강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20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북한이 체제 생존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비대칭전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비대칭전력 강화가 동아시아 안보 불안정성 가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북한의 비대칭전력 강화가 동아시아 안보 불안정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면, 다중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불안하게 조성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요약하면, ‘불안정성 강화’와 ‘복합성의 심화’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만, 러시아의 공세가 지속되고 있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부수적 피해들이 유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신 밀월(新 蜜月)관계’를 형성하면서, 동아시아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도 현재 진행형이라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경쟁 등이 심화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도 유지되는 상황이다. 동아시아는 군사 분야는 물론 경제, 에너지 등 비군사 분야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외교적 관계 변화에 따른 국가 전략에도 선택적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안보 위기는 다양한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이고,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때로는 자연 재난과 인위적 재난이 연계되어 상승작용을 하기도 하고, 북한의 특수한 위협과 결합해 전혀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생성되기도 한다. 이렇게 다중화된 안보 위기는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려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안보 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들은 그 위기를 더욱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및 대외 전략적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부정적 요인이 되어 북한의 비대칭전력 강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첫 광복절을 맞아,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 다고 선언하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지원과 전력 공급, 농업 및 의료 기술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경제적 지원과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3)</sup> ‘담대한 구상’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축은 ‘비핵화 협상 개시 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대화 노력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축은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 단계’로 초기부터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고, 포괄적 합의를 하여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세 번째 축은 ‘비핵화 이행시기’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정치, 경제, 군사 분야를 포괄하는 상응 조치를 제공하는 것이다.<sup>4)</sup>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 시기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대북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뿐 아니라 미사일, 사이버공격, 무인기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활용하여 복합전술을 전개하고 있다. 단순히 북한이

---

3) 제20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8.1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4758>> (검색일: 2022.11.5.).

4) 외교부, “담대한 구상,” <[https://dnk.mofa.go.kr/www/wpge/m\\_25492/contents.do](https://dnk.mofa.go.kr/www/wpge/m_25492/contents.do)> (검색일: 2022.11.5.).

핵을 포기한다고 해도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일시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 처한 국제 정치적 환경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전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따른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 동아시아에서 중첩되어 발생하는 다양한 안보 위기 요인들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북한이 추진하는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도 분석하여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할 필요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중첩되어 발생하는 다양한 안보 위기 요인들을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살펴보고, 그 속에서 북한이 추진하는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추진 시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북정책 기조는 제시되었지만, 아직 각론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가 2023년 초부터 유관 부처들이 세부 정책과제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함의 또는 정책 수립의 단초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해본다.

## 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토대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 세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자문의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내용을 보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짧은 준비기간 수립된 연구계획이 다소 미흡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 수행 초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집단적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연구 설계상 문제점을 조정하였다. 이후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문헌과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종합하여 분석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분석 내용을 심화·발전시키고자 한다. 또 북한의 비대칭전력 강화 배경 및 현황, 역량 파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 문헌 및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행한 분석 보고서 등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여 내용을 보강할 계획이다.

본 연구가 담아내고자 하는 내용 설명에 앞서, 본 연구는 2022년 10월~12월까지 약 3개월의 짧은 기간 진행되어 연구 분석 내용이 20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다중안보 위기 속에서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다음의 목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밝히고, 왜 현시점에서 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서술하고자 한다.

다음 제2장은 이론적 배경이다.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국가안보 위기의 개념 및 유형을 설명하고, 다중안보 위기의 개념 및 특성을 제시한다. 이어 비대칭 및 비대칭전력의 개념을 정리한 후 비대칭전력의 종류와 유형을 분류하고, 비대칭전력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이 무엇

인지 제시한다. 제2장은 개념 정립 장으로서 본 연구에서 논의될 내용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제3장은 동아시아 안보 위기의 다중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제3장은 크게 동아시아 안보 위기의 현재와 미래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에서는 다중안보 위기 시대가 도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동아시아 정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어 미래에 해당하는 2절에서는 동아시아 다중안보 위기의 분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2023년 동아시아 정세를 전망하고, 가까운 미래에 동아시아 다중안보 위기가 얼마나 고조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은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가장 먼저 북한의 비대칭전력 강화 배경을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김정은 시대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때, 김정은 시대의 군사전략 분석뿐 아니라 북한 당국에서 발행하는 노동신문에 나타난 북한의 비대칭전력 역량도 함께 분석하기로 한다. 노동신문 분석은 김정은 정권이 비대칭전력을 운영하면서 유형별로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지와 실질적인 전력 현황을 분석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후 비대칭전력의 현황을 유형별로 파악하고 전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칭전력 중 다수 연구가 진행된 핵무기와 미사일을 논외로 하고 화학무기 및 생물학무기, 특수작전부대, 사이버 공격 역량, 암호화폐 탈취 역량 등에 국한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마지막 장은 제5장으로 결론에 해당한다. 제5장은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함의를 제시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간략하게 서술한다.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함의는 북한의 비대칭전력 역량을 전망하는 것과 북한의 비대칭전력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이후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북한 비대칭전력 증강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안보 위기의 개념

## 가. 국가안보 위기의 개념 및 유형

‘안보 위기(Security Crisis)’라는 용어는 신문과 방송에 수시로 등장하여, 일반 국민도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하게 된다. 하지만 안보 위기는 사전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채 남용되고 있다. 학자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안보 위기를 정의하고 있어 그 의미와 포괄하는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보 위기라는 용어를 접하는 이들도 저마다 다른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일반적으로 안보 위기는 ‘국가안보 위기’를 지칭하는데, 국가안보라는 용어가 상징하는 바가 너무 다양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이해시키기는 쉽지 않다. 국가안보라는 용어가 특정한 상황과 맞물린 독특한 정치적 의미가 특정한 사회 또는 집단에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국가안보는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르게 정의되는 개념일 수 있다.<sup>5)</sup> 각 국가가 처한 상황과 시대적 배경에 따라 국가안보 위기가 의미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가안보 위기에 대한 개념적, 이론적 연구는 심화하지 못했다.

국가안보의 핵심 목표는 다름 아닌 ‘생존’이다. 이러한 대명제 탓에 국가안보 위기는 “대내외적인 물리적 공격이나 위협으로부터 주권국가와 통치체제를 방어하는 것”이라는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협소하게 논의되어왔다. 국가를 기본 단위로 국외적 위협, 대체로 군사적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설명되어 온 것이다.<sup>6)</sup> 군사

5) 정준호, “국가안보개념의 변천에 관한 연구,” 『국방연구』, 제35권 2호 (1992), pp. 6~13.

6) 이재은,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 위기관리 법제화의 의의와 내용 분석,” *Crisisonomy*, 제2권 2호 (2006), pp. 19~21.

적 측면에 치중한 국가안보 위기 논의는 물리적 위협의 주체와 수단에 몰두하게 만들고, 실존하는 위협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과거 국가안보 위기는 외부적 군사 위협을 중시하고, 국가 중심의 전통적 국가안보 이론이 핵심으로 다뤄졌다.<sup>7)</sup>

하지만 냉전체제가 흔들리면서 새로운 국가안보 이론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급속한 산업화와 세계화와 함께 탈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가 주권과 국민의 생존 및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다양하게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혹은 위기, 빈곤과 기아, 질병의 확산, 공급망을 둘러싼 경쟁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국가안보를 위협하기 시작하였다.<sup>8)</sup> 새롭게 등장한 국가안보 위기 촉발 요인은 국가를 넘나들며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냉전 시기 안보 환경을 근간으로 한 전통적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념이 바로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이다. 포괄적 안보 개념은 전쟁이나 국지도발과 같은 무력에 기반한 영토침략 혹은 주권 침해뿐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비군사 요소들까지 포괄한다.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경제와 사회안정, 환경문제, 과학기술의 진보 등이 군사적 안위 못지않게 국가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sup>9)</sup>

포괄적 안보 관점에서 국가안보를 재정의하면, 국가안보는 “국가의

7) 김병조, “‘사회안보’ 이론의 한국적 적용: 도입, 채택, 발전,” 『국방연구』, 제54권 1호 (2011), p. 2.

8) 이재은, “국가안보 환경의 변화와 국가위기관리: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위기 유형,”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2호 (2013), p. 179.

9) 김영호,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군의 역할,” 『평화연구』, 제17권 2호 (2009), pp. 157~187.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모든 군사적 위기와 비군사적 위기로부터 국민, 영토, 주권, 핵심 기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10)</sup> 다시 말해, 현대적 의미의 국가안보 위기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군사적, 비군사적 요소들에서 촉발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양한 국가안보 위기 요인 및 유형을 포괄적 안보 관점에서 정리하면 아래 <표 II-1>과 같다.

<표 II-1> 포괄적 안보 관점에서의 국가안보 및 국가 위기 유형

| 국가 구성요소 | 국가안보 유형 | 국가 위기 유형    |       | 국가 위기 종류                                                                                          |
|---------|---------|-------------|-------|---------------------------------------------------------------------------------------------------|
| 국민      | 국민안보    | 국민생활 위기     |       | 취약계층 위기, 생활경제 위기, 생활치안 위기, 교통생활 위기, 직업생활 위기, 학교생활 위기, 생활식품 위기, 생활용품 위기, 생활건강 위기, 생활시설 위기, 생활환경 위기 |
|         |         | 재난 위기       | 자연 재난 | 태풍, 호우, 집중호우, 폭풍, 지진, 해일, 폭설, 폭염 등                                                                |
|         |         |             | 인적 재난 | 화재, 붕괴 폭발, 침몰, 추락, 교통사고, 유해 화학 물질 사고 등                                                            |
| 영토      | 영토안보    | 전통적 군사안보 위기 |       | 전쟁, 국지도발,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확산, 주변국 군사적 위협, 주변국과 갈등·충돌, 영토침범, 주권 훼손, 국지분쟁, 테러 등                         |
| 주권      | 주권안보    |             |       |                                                                                                   |
| 핵심 기반*  | 핵심기반 안보 | 공공핵심 기반 위기  |       | 금융, 교통·수송, 전력, 정보통신, 에너지, 원자력, 담, 정부시설, 공공안전, 공중보건, 산업단지, 유물·유적 등                                 |
|         |         | 민간핵심 기반 위기  |       | 상업시설, 생활필수품, 사회갈등, 유해물질 등                                                                         |

\* 핵심 기반은 국가를 운영하고 유지·발전시키는 핵심 기능 및 시설, 시스템 등 3가지 요소를 통칭.  
출처: 이재은, “국가안보 환경의 변화와 국가위기관리: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위기 유형,” p. 191.

10) 이재은, “국가안보 환경의 변화와 국가위기관리: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 위기 유형,” p. 189.

국제 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가안보 위기의 특성도 <표 II-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큰 폭으로 변화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냉전체제 하의 이념대결 및 전면전쟁의 위기는 다소 낮아졌지만, 민족, 종교, 에너지, 문화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 잦은 갈등이 발생하고, 소규모 분쟁이 늘었다. 또 테러리즘이나 마약, 국제적 규모의 범죄, 난민, 사이버공격, 자연재해, 환경문제, 전염병 등 다양한 초국가적 위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이러한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한국 역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국가안보 위기관리의 총체라고 이야기하는 냉전 시대의 정의를 고수하기 어려워졌다. 물론, 한국은 극단적인 군사적 대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므로 냉전 시대의 국가안보 위기라는 정의가 어느 정도는 통용될 여지는 충분하다. 하지만 한국 또한 국가안보 위기를 포괄적 안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나. 다중안보 위기의 개념 및 특성

현대화와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국제 안보 환경의 복잡성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위기 발생의 빈도와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추가될 뿐 아니라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안보 위기가 몰아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복합화된 안보 위기라는 뜻의 ‘복합위기(Twin/Multi Crisis)’<sup>11)</sup>로 명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층적(multi-layered)이고, 동시다발적(simultaneous

---

11) 복합위기는 IMF가 1988년 출판한 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에서 금융위기(Financial Crisis)를 은행위기(Banking Crisis), 외환위기(Currency Crisis), 외채위기(Foreign-debt Crisis), 그리고 복합위기(Twin/Multi Crisis)로 구분하면서 두루 사용된 개념이다. IMF, *World Economic Outlook* (Washington D.C.: IMF, 1988).

multiple)으로 발생하는 위기를 더욱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다중안보 위기(Multiple Security Crise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정리하면, ‘다중안보 위기’는 “군사 부문뿐 아니라 비군사적 부문에서 발생하는 다층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안보 위기”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다중안보 위기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중안보 위기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IMF WEO에 나타난 복합위기의 특징과 팻 테일 분포(Fat-tailed distribution)를 활용하고자 한다.

첫째, 다중안보 위기는 쉽사리 전이·확산·증폭하고 또 다른 위기를 촉발하는 직·간접적 영향요인이 된다. IMF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은행위기, 외환위기, 외채위기 등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한 가지 위기 유형이 다른 위기 유형으로 전이·확산하는 경우가 많다. 즉, 위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은행위기로 연결된 사례와 1980년대 중남미 금융위기<sup>12)</sup>, 1994년 멕시코 위기, 1990년대 초 발생한 북유럽 3국 경제 위기 등이다. 이 사례들 모두 특정한 위기에서 시작되어 다른 유형의 위기를 촉발한 복합위기, 즉 다중 위기 사례이다.<sup>13)</sup> 이는 금융 분야에서 발생한 다중 위기이지만, 실제 안보 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전이·확산·증폭 사례들이 다수 발견된다.

둘째, 다중안보 위기는 소요 비용이 많이 들고, 위기 회복 기간이 길다. IMF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금융위기의 유형은 상이하지만, 원인은 경제 불균형, 환율 불균형, 금융시장 왜곡, 자산 가격 버블 등으로 유사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기 촉발 원인 또는 규모에 따라 소요 비용이나 손실 규모, 회복 기간 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

12)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은행위기가 외채위기로 전이되었지만,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등의 국가는 외채위기가 은행위기로 연결되었다.

13) 신중협·최형선·최원,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서울: 보험연구원, 2010), pp. 20~22.

것이다.<sup>14)</sup> 현실적으로 금융위기 유형별 원인을 파악하고, 발생 시점 등을 세분류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IMF는 금융위기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IMF WEO의 유형별 금융위기 회복 기간 및 GDP 손실 추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II-2> 금융위기 회복 기간 및 GDP 손실 추이

|                | 발생건수 | 평균 회복<br>기간(년) | 위기 당<br>총생산<br>누적손실(%) | 총생산<br>손실(%) | 총생산손실<br>포함한 위기<br>당 누적 총생산<br>손실(%) |
|----------------|------|----------------|------------------------|--------------|--------------------------------------|
| 외환위기           | 158  | 1.6            | 4.3                    | 31           | 7.1                                  |
| 선진국            | 42   | 1.9            | 3.1                    | 55           | 5.6                                  |
| 신흥국            | 116  | 1.5            | 4.8                    | 64           | 7.6                                  |
| 외환<br>crashes* | 55   | 2.0            | 7.1                    | 71           | 10.1                                 |
| 선진국            | 13   | 2.1            | 5.0                    | 62           | 8.0                                  |
| 신흥국            | 42   | 1.9            | 7.9                    | 74           | 10.7                                 |
| 은행위기           | 54   | 3.1            | 11.6                   | 82           | 14.2                                 |
| 선진국            | 12   | 4.1            | 10.2                   | 67           | 15.2                                 |
| 신흥국            | 42   | 2.8            | 12.1                   | 86           | 14.0                                 |
| 외환·<br>은행위기    | 32   | 3.2            | 14.4                   | 78           | 18.5                                 |
| 선진국            | 6    | 5.8            | 17.6                   | 100          | 17.6                                 |
| 신흥국            | 26   | 2.6            | 13.6                   | 73           | 18.8                                 |

\* 외환 crashes는 외환시장이 75% 이상 압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을 때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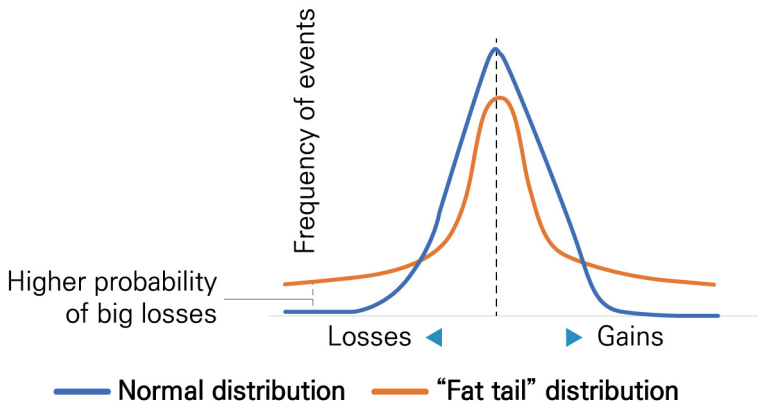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Washington D.C.: IMF, 1998), 재인용: 신중협·최형선·최원,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p. 19.

<sup>14)</sup> IMF, *World Economic Outlook* (Washington D.C.: IMF, 1998).

<표 II-2>를 살펴보면, 발생 건수는 외환위기가 158건으로 다른 위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지만, GDP 대비 소요 비용과 회복 기간은 은행위기와 복합위기가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은행위기와 외환위기가 각각 유발하는 피해보다 이 두 위기가 결합할 때 그 피해가 더욱 커짐도 확인된다. 즉, 위기는 하나의 위기보다 다중화할 때, 그 피해 규모가 훨씬 커지고 회복에 큰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뜻이다.

셋째, 사회의 복잡성이 증가하면 할수록 다중안보 위기의 발생확률 또한 함께 증가한다. 다시 말해, 사회구조의 복잡성과 다중안보 위기 발생확률은 동기화(Coupling)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존 캐스티(John Casti)는 위기 발생의 확률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니라 팻 테일 분포를 이룬다고 봤다.<sup>15)</sup>

<그림 II-1> 팻 테일 분포와 정규분포 비교



출처: "What are Fat Tails in Trading?" *Bookmap*, <<https://bookmap.com/blog/what-are-fat-tails-in-trading/>> (Accessed December 7, 2022).

<sup>15)</sup> John Casti, *X-Events: The Collapse of Everything* (New York: William Morrow, 2012).

쉽게 설명하자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통계상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현상들이 정규분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큰 가능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적 확률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극한의 사건이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위기 발생의 확률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닌 팻 테일 분포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안보 위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다양해짐에 따라 전통적 국가행위자 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안보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 2. 비대칭전력의 개념 및 특징

### 가. 비대칭 및 비대칭전력의 개념

비대칭(Asymmetry)의 사전적 의미는 대칭(Symmetry)이 아닌 상태, 즉 불균형(Unbalanced)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비대칭이라는 용어는 각종 군사용어의 수식어로 널리 사용되는데, 그 예로는 비대칭 전력(Asymmetric Power)과 비대칭 전략(Asymmetric Strategy), 비대칭 전쟁(Asymmetric Warfare), 비대칭적 갈등(Asymmetric Conflict), 비대칭 작전(Asymmetric Operations), 비대칭 위협(Asymmetric Threat) 등이 있다. 이때 비대칭은 질적 수준이나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대칭은 ‘특별함’이나 ‘독특함’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

각종 군사용어와 조합되어 다양하게 활용되는 비대칭이라는 용어는 대체로 피수식어로서 역할을 한다. 이때 비대칭은 적군이나 상대 군이 가지는 군사적 힘이나 의지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다. 즉, 군사적 측면에서의 비전통적인 접근이나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전통적 수단의 활용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군에서 비대칭을 “상대방과 다른 수단, 방법 및 차원의 그 무엇”으로 정의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고 볼 수 있다.<sup>16)</sup>

사실 비대칭은 매우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온 개념이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만들어진 것 같은 착각이 드는 이유는 미국이 냉전 종식 후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춘 새로운 군사전략을 강조하면서 비대칭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냉전 시기에는 미국과 소련이 군사적 균형을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군사전략 분야에서 비대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미·소 양국은 핵전쟁에 대비하여 전략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전략폭격기 등의 3대 전력을 유지하면서, 군사적 균형 상태를 이루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이다.<sup>17)</sup>

비대칭 개념은 앤드류 맥(Andrew Mack)이 전쟁에서 강대국과 싸워 이긴 약소국의 승리 요인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였다.<sup>18)</sup> 이후 비대칭 개념이 군사 분야에서 다시 등장한 것은 냉전 종식 후 변화하는 국제 안보 환경을 반영해 미국이 발표한 *Report of the Quadrennial Review(QDR, 4년 주기 국방전략검토보고서)*에서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래의 적대 세력이 중요 시설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고, 미국의 지휘 및 통제, 통신·정보네트워크를 차단하거나 미국의 결의를 약화하기 위해 예상되는 피해보다 더 큰

---

16) 합동참모본부는 비대칭작전을 “상대방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상대방과 다른 수단, 방법, 차원으로 싸우는 작전, 즉 기술적으로 아군보다 월등히 우세한 적과 싸울 때는 기술 위주의 작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싸우고, 기술적으로 아군보다 열세한 적과 싸울 때는 기술 위주로 싸우는 작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1998), p. 200.

17) Bruce W. Bennett, “Responding to Asymmetric Threats,” in *New Challenges, New Tools for Defense Decisionmaking*, eds. Stuart Johnson, Martin Libicki and Gregory Tervenrton (Santa Monica, Ca: RAND, 2003), p. 36.

18) Andrew Mack, “Why Big Nations Lose Small Wars: The Politics of Asymmetric Conflict,” *World Politics*, vol. 27, no. 2 (1976).

피해를 주고자 비대칭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였다.<sup>19)</sup> 이와 함께 미 국방부의 비정부 고문 기관인 국방자문위원회(National Defense Panel: NDP)도 미래의 적은 미국의 군사작전을 무력화해 미국은 물론 협력 국가들의 통신, 교통, 세력 투사에 활용되는 다른 수단들까지 취약하게 만들 것으로 예측하기도 하였다.<sup>20)</sup> 이후 미국 내에서 발행되는 각종 국가안보 혹은 군사안보 관련 문서 및 연구보고서에는 적군이 비대칭 위협을 선택할 우려가 크니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비대칭전력의 위협성에 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는 2001년 9.11테러 직후였다. 이 시기 이후 미국은 테러리즘을 중심으로 한 비대칭전력 연구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연구가 비대칭 행위자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공격 대상의 취약성에 대한 전술적 또는 작전적 힘을 사용 방법에 초점을 맞춘 것을 고려할 때, 눈에 띄는 변화이다.<sup>21)</sup> 미국의 비대칭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미국은 비대칭을 비정상적이고 불규칙하며, 미국이 대처할 수 없고 미국의 능력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2)</sup> 미국의 비대칭 개념이 전 세계에 동일하게 통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비대칭 개념에 관한 연구와 비대칭성에 대한 개념 정의를 비교·분석한 결과, 미국의 비대칭 개념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19) William S. Cohen and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Report of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Washington D.C.: DIANE Publishing, 1997). 참조.

20) National Defense Panel, “Transforming Defense: National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Joint Force Quarterly*, Summer (1997), pp. 10~11.

21) Kenneth Mckenzie, Jr., *The Revenge of the Melians: Asymmetric Threats and the Next QDR*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2000), p. 2.

22) Steven J. Lambakis, “Reconsidering Asymmetric Warfare,” *Joint Forces Quarterly*, vol. 36 (2005), p. 104.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비대칭 개념을 바탕으로 비대칭전력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비대칭전력은 비대칭 전략을 전개할 때 활용되는 수단으로, 전쟁 수행의 목적과 기능을 갖춘 무력이나 군사력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비대칭전력에는 무기체계뿐 아니라 장비와 조직, 전술 교리, 군사훈련, 기반 시설 등의 유·무형 자산이 모두 포함된다. 비대칭전력이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지만, 이는 비대칭 위협보다는 좁은 범위를 갖는다. 비대칭전력이 수단 중심이라면, 비대칭 위협은 수단뿐 아니라 보유 전력들을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방법과 차원에서 운용하는 전체를 포함한다. 비대칭 위협에 비대칭전력이 포함되는 뜻이다.<sup>23)</sup> 비대칭전력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유형은 무기체계로, 비대칭전력은 비대칭 무기체계와 등치가 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Weapon of Mass Destruction: WMD)와 기습공격이 가능한 무기 등이 대표적인 비대칭전력, 비대칭 무기체계에 속한다. 본 논문에서도 보유만으로도 적에게 상당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비대칭 무기체계에 초점을 맞춰 비대칭전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나. 비대칭전력의 종류와 유형

비대칭전력은 상대방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전력을 피해 상대방의 약점 또는 급소를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의미한다.<sup>24)</sup> 과거 전쟁에서 주 공격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야포나 전차 등과 같은 재래식 무기가 아닌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생물·화학무기, 장사정포, 잠수함,

---

23) 권양주,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관한 소고,” 『KIDA 주간국방논단』, 제1469호 (2013), p. 3.

24) 박창희, 『군사전략론』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4), p. 525.

특수부대, 사이버 전력 등이 비대칭전력에 포함된다. 생화학무기를 이용한 공격 또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국가에 대한 비국가 단체나 조직의 테러 공격, 컴퓨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같이 상대방이 대처하기 어려운 수단을 다양하고 예기치 못하게 활용한다. 쉽게 말해, 정통적이지 않은, 이단적 접근 방식 활용 시 활용되는 무기체계를 모두 비대칭전력이라 지칭할 수 있다는 뜻이다.<sup>25)</sup>

대표적인 비대칭전력에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장사정포, 잠수함(정) 등과 같이 대량 살상이 가능하고 기습공격이나 게릴라전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들이 포함된다. 전자기펄스(Electromagnetic Pulse: EMP)탄, 급조폭발물(Improvised Explosive Device: IED), 특수부대, 사이버공격 등과 같이 방어하기 어렵고 피해 범위 또한 방대하다. 과거 전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탱크나 전차, 전투기, 포, 미사일, 총 등의 재래식전력이 아닌 공격수단에 따른 비대칭전력이다.

비대칭전력은 종류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다. 먼저, 대량 살상 능력이 있고 운용이 수월해 게릴라전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들을 살펴볼 것이다. 핵무기(Nuclear Weapon)는 핵분열을 이용하는 원자폭탄과 부분적 핵융합을 유발하는 수소폭탄, 중성자 방사를 통해 인명 살상 기능을 극대화한 중성자탄 등을 포함하는데, 공격 시 폭발에 의한 충격파와 핵분열에 따른 고열의 열 복사선, 낙진으로 인한 방사선 피해, 전자기파 피해 등 규모가 크고 반영구적인 피해를 유발한다.<sup>26)</sup> 생화학무기(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는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 리케차(Rickettsia) 등을 가공해 만들어지며, 개발과 생산이 용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은닉 살포가 가능하여 운용상 이점이 크지만, 공격

25) Montgomery Meigs, "Unorthodox Thoughts about Asymmetric Warfare," *Parameters*, vol. 33, no. 2 (2003), p. 4.

26) 국민재난안전포털, "화생방무기," <[https://m.safekorea.go.kr/idsiSFK/neo/main\\_m/set/CBP.html](https://m.safekorea.go.kr/idsiSFK/neo/main_m/set/CBP.html)> (검색일: 2022.12.13.).

즉시 인지하기 어렵고 광범위한 확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sup>27)</sup> 장사정포(Long Range Artillery)는 다연장 로켓포와 자주포와 같이 사정거리가 긴 화포를 통칭한다. 장사정포는 동시다발적 공격이 가능하여 요격하기 어렵고, 운용이 편리해 사전 탐지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sup>28)</sup> 잠수함(정)은 수중 잠행이 가능한 함정으로 군사적 공격력은 물론 정보수집 능력도 있고, 지원 세력이 없을 때도 생존력이 높은 전략자산이다. 잠수함(정)은 해양 방어의 근본이기도 하지만, 군사력을 배가시키는 원동력이자 재래식전력에 대한 억제력이 큰 무기체제이다.<sup>29)</sup>

다음으로는 공격은 비교적 쉬운데 피해 규모가 광범위하고 방어가 어려운 비대칭전력의 종류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이버공격이다. 사이버공격은 하나 이상의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 혹은 여러 대의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버공격은 공격 대상 컴퓨터를 비활성화하거나 오프라인으로 만드는 공격과 대상 컴퓨터의 데이터에 접근해 관리자 권한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격 등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30)</sup> 사이버공격은 속도가 빠르고 위협의 수위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진다.<sup>31)</sup> 또 정치 및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어

27) 박민우 외, “생물무기 특성과 사례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제13권 4호 (2017), pp. 442~444.

28) 육중관·황수진·김태구, “다대다 교전 효과도에 있어서 각 요소 성능의 영향력 연구: 장사정포 요격체계 시뮬레이션,” 『한국시뮬레이션학회 논문지』, 제29권 3호 (2020), pp. 57~59.

29) 방진희, “아시아의 잠수함 전력,” 『국방과 기술』, 2003년 1월호 (2003), p. 78.

30) Josh Fruhlinger, “사이버 공격이란 무엇인가: 의미와 사례, 동향분석,” 『ITWorld』, 2020.3.3., <<https://www.itworld.co.kr/news/145522>> (검색일: 2022.12.13.).

31) 권혁천·이용준·박원형, “한국의 사이버공격 비교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융합보안논문지』, 제20권 5호 (2020), p. 20.

국제사회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대표적인 비대칭전력이다. 전자기 펄스탄(EMP-Bomb)은 고출력의 전자기파를 순간적으로 발생시켜 폭발과 동시에 적의 지휘통제 체계와 방공망 등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무기를 의미한다.<sup>32)</sup> 전자기탄은 그 자체로는 인명 피해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전자기기들의 회로를 파괴하여 전기로 작동되는 모든 기기를 마비시킬 수 있고, 핵시설 기폭장치나 미사일 유도장치 등의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어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sup>33)</sup> 급조폭발물(IED)은 살상이나 파괴, 공격을 목적으로 폭발성 있고, 치명성 있는 부품을 결합하여 인위적으로 급조한 모든 폭발물을 의미하며, 군용 제품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비군사적 구성품으로 제조된 무기를 뜻한다.<sup>34)</sup> 상용폭약이나 군용폭약, 직접 제작한 폭약, 각종 화기탄, 화학적·생물학적 약품이나 병원체 등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급조한 모든 폭발성 장치들이 포함된다.<sup>35)</sup> 급조폭발물은 새로운 무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비대칭전력이지만, 전력과 뇌관, 폭발물, 기폭장치 등 4가지 조건만 갖추면 손쉽게 만들 수 있다. 급조폭발물만으로는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없지만, 탐지가 어렵고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른다는 강박이 심리적 문제를 야기해 전투 역량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한다.<sup>36)</sup> 마지막으로 특수부대

32) “북, 대미 EMP·사이버 연계공격 가능성,” 『자유아시아방송』, 2021.11.23.,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empcyberattack-11232021175131.html](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empcyberattack-11232021175131.html)> (검색일: 2022.12.13.).

33) 김영호·김수홍·박태용, “EMP의 개념 및 대응 방안,” (한국정보통신학회 추계종합 학술대회 자료집, 2015.10.29.~10.31.), p. 469, <<https://koreascience.kr/article/CFKO201531751945784.pdf>> (검색일: 2022.12.13.).

34) 문광진·김재홍, 『대테러 정책 발전방안: IED 관련 대비 과제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9), pp. 17~18.

35) 「폭발물처리 훈령」 (제정 2010. 12. 27. 국방부훈령, 2018. 1. 24. 일부개정), 제3조 별표, <<https://www.ulx.co.kr/법률/2100000111854-38083-폭발물처리>> (검색일: 2022.12.13.).

36) “美가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진짜 이유 ‘급조폭발물(IED) 공포,’” 『한국일보』, 2020.

(Special Forces)는 특수한 작전을 수행하는 임무 부대를 의미한다.<sup>37)</sup> 특수부대의 임무는 대체로 특수정찰이나 비정규전, 정보수집, 표적확보 및 제거, 주요시설 파괴, 통로개척, 심리전, 대테러전 등으로 다양하며, 정예 부대로 운영된다.<sup>38)</sup> 특수부대는 목적 임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합동작전을 병행하거나 비군사적 테러 집단 등에 대한 대테러 작전 등 새로운 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해나가고 있다.<sup>39)</su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대칭전력은 통상 무기체계와 같은 수단을 지칭하고, 각각의 종류별로 그 특성 또한 상이하므로 비대칭전력 자체를 유형화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대칭전력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전개하는 다양한 비대칭 전략을 유형화하여 비대칭전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 반추해보고자 한다. 비대칭 전략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이론은 아직 확정적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본 연구는 관련 이론 중 비교적 체계적으로 개념을 정립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메츠(Steven Metz)와 존슨(Douglas Johnson II)의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메츠와 존슨의 이론을 바탕으로 비대칭 전략을 유형화하면, 아래 <표 II-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3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301024731142>> (검색일: 2022.12.13.).

37) 최용성, “게릴라전 양상의 변화과정 고찰,” 『전사』, 제6호 (2004), p. 34.

38) 특수작전사령부, 『미 육군교리 3-05 특수작전 번역집』 (이천: 특수작전사령부, 2019), pp. 2-15-2-2-15-15.

39) 김광현,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육군의 특수작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군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 p. 39.

<표 II-3> 비대칭 전략의 유형화

| 비대칭 분류            | 유형                                                                                                                                                                                                                      | 비고                                                                                                                                                                                                       |
|-------------------|-------------------------------------------------------------------------------------------------------------------------------------------------------------------------------------------------------------------------|----------------------------------------------------------------------------------------------------------------------------------------------------------------------------------------------------------|
| 범위<br>(Dimens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긍정적/부정적 비대칭</li> <li>• 단기적/장기적 비대칭</li> <li>• 의도적/고정적 비대칭</li> <li>• 저위험/고위험 비대칭</li> <li>• 개별적/통합적 비대칭</li> <li>• 물리적/심리적 비대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 간의 불균형적 관계 이용</li> <li>• 비대칭 추구 기간에 따른 구분</li> <li>• 전략 활용의 의도성에 따른 구분</li> <li>• 사용 수단의 비용과 위험도</li> <li>• 대칭전력과 연계 여부</li> <li>• 전력의 효과가 미치는 영향</li> </ul> |
| 수준<br>(Leve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 전략적(military strategic) 비대칭</li> <li>• 정치 전략적(politic strategic) 비대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칭적 군사전략 추구</li> <li>• 군사적 이익을 위한 정치적 수단 추구</li> </ul>                                                                                                         |
| 형태<br>(For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법(Method)의 비대칭</li> <li>• 기술(Technology)의 비대칭</li> <li>• 의지(Will)의 비대칭</li> <li>• 규범적(Normative) 비대칭</li> <li>• 조직(Organization)의 비대칭</li> <li>• 인내(Patience)의 비대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이한 작전개념/전술 사용</li> <li>• 무기체계/군사기술의 차이</li> <li>• 추구하는 목표의 차이</li> <li>• 윤리·도덕상의 차이</li> <li>• 군사적 조직력의 차이</li> <li>• 장기전에서의 인내 차이</li> </ul>                  |

출처: Steven Metz and Douglas Johnson II, "Asymmetry and U.S. Military Strategy: Definition, Background and Strategic Concepts," pp. 5~12의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메츠와 존슨에 따르면, 비대칭 전략의 분류는 크게 비대칭 범위(Dimension)와 수준(Level), 형태(Form)로 나눌 수 있고, 각 분류별 특성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다. 먼저, 비대칭 범위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면, 비대칭 유형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단기적 혹은 장기적, 의도적 혹은 고정적, 저위험 혹은 고위험, 개별적 혹은 통합적, 물리적 혹은 심리적 비대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대칭의 수준에 따라 유형화하면, 군사 전략적 비대칭과 정치 전략적 비대칭으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대칭 형태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면, 방법(Method)과 기술(Technology), 의지(Will), 규범(Normative), 조직(Organization), 인내(Patience)의 비대칭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40)</sup>

<sup>40)</sup> Steven Metz and Douglas Johnson II, *Asymmetry and U.S. Military Strategy: Definition, Background and Strategic Concepts* (P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US Army War College, 2001), pp. 5~12.

메츠와 존슨의 비대칭 전략 유형은 전략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분석하여 작전이나 전술적 영역을 포함한 용병술체계에서의 비대칭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비대칭 전력은 무기체계와 같은 수단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들의 비대칭 전략 개념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 물론, 북한의 비정형성이나 예측 불가능성은 메츠와 존슨의 비대칭 전략 유형을 적용하는 데 오류를 생성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분석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다. 비대칭전력의 특징

비대칭전력의 종류와 비대칭전력을 활용한 전략의 유형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대칭전력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특징은 ‘상대성’이고, 두 번째 특징은 ‘파급성’, 세 번째 특징은 ‘변칙성’이다.

‘상대성’은 비대칭전력의 가장 큰 특징이다. 비대칭은 독자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 두 국가 혹은 다수 국가 간의 전력 대칭을 이룰 때 비대칭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대칭은 그 자체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대칭 전력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sup>41)</sup> 만약 특정 국가가 새로운 전력과 전략을 도입한다 해도 상대국이 그와 유사한 전력과 전략을 동원한다면, 특정 국가가 새롭게 도입한 전력은 비대칭이라 할 수 없게 된다. 이뿐 아니라 비대칭전력은 시대에 따른 상대성도 갖는다. 예를 들어, 핵무기는 냉전 시대에는 미·소 양국이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대칭전력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핵무기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나 테러 집단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비대칭전력으로 분류

<sup>41)</sup> Bruce Bennett et. al., *What Are Asymmetric Strategies?* (Santa Monica: Rand, 1999), p. 3.

되고 있다.<sup>42)</sup> 이렇듯 비대칭전력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고, 상대방이 비대칭적 위치에 놓여야 하므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대성’이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파급성’이다. 비대칭전력은 그 자체만으로는 한계를 가지기도 하고, 대칭전력과 달리 이전의 전쟁이나 교리, 훈련 등에서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즉, 혁신적이고도 새로운 비대칭 전략은 일반적인 대칭 전력과는 다른 혁신이 요구되는데, 검증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sup>43)</sup> 그런데도 비대칭전력이 중대한 위협으로 떠오른 이유는 비대칭전력의 파급성 때문이다. 비대칭전력은 그 자체만으로는 결정적 승리를 담보해 주지 못한다. 하지만 비대칭전력이 다른 수단 또는 방법들과 결합하여 만드는 시너지 효과는 비대칭전력의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sup>44)</sup> 또 대칭전력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더라도 비대칭전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군사력이 약한 국가도 군사력이 강한 국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 수도 있다. 종합하자면, 비대칭전력은 그 자체의 위력도 크지만, 전쟁 양상에 크나큰 파급효과를 주어 판세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이다.

마지막은 ‘변칙성’이다. 일반적으로 비대칭전력은 사전에 공격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예측 불가능한 공격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런데도 비대칭전력이 더 큰 위력을 갖는 지점은 곧바로 예측한다 해도 공격을 막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가 어떤 종류의 비대칭전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더라도 운

---

42) 박창희,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국방정책연구』, 제24권 1호 (2008), p. 406.

43) Bruce Bennett et. al., *What Are Asymmetric Strategies?* p. 7.

44) 박창희, 『군사전략론』, pp. 523~532.



용 방식에 따라 수십, 수백 가지 방법으로 공격할 수 있어 대비가 어렵다. 다양하게 변주된 방식으로 비대칭전력을 운용한다면, 보유 여부 등을 안다고 해도 변칙적 운용 가능성 때문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즉, 비대칭전력이라는 용어에 내포되어있는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변칙성’을 높여 상대에게 위협적인 공격 수단으로 인식되게 한다는 뜻이다. 비대칭전력의 변칙성은 상대국이 인지 왜곡(Cognitive Distortion)을 겪게 만들고, 그 결과 비대칭전력을 보유한 국가에 대해 고정되고 왜곡된 태도를 보유하게 하여 비대칭전력의 효과성을 더 높이는 결과를 낳게 한다.<sup>45)</sup>

비대칭전력이 지니는 기본적 특징들은 상대국의 대응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상대국이 비대칭전력 보유국에 대해 더 큰 혼란을 느끼도록 만들어 비대칭성이 재강화되는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다.

---

<sup>45)</sup> James E. Dougherty and Robert L. Pfaltzgraff Jr.,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 Comparative Survey* (Cambridge: Harper & Row, 1981), pp. 282~284.



### Ⅲ. 동아시아 안보 위기의 다중화(多重化)



# 1. 동아시아 안보 위기의 현재

## 가. 다중안보 위기 시대의 도래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동아시아가 세계질서의 무대로 주목받기 시작한 지 꽤 시간이 흘렀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어 세계 금융위기로 이어진 탓이다. 이 시기 세계 여러 나라는 포스트 세계 금융위기 시대에 대한 새로운 전략들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논의된 수많은 국제정치 담론들은 미국쇠퇴론과 중국부상론을 꺼내 들었다. 미국이 촉발한 세계 금융위기 대응에 한계를 보여준 미국과 달리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제 역할을 다한 중국의 모습은 새로운 질서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심어주기 충분하였다.<sup>46)</sup>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안보지형 변화를 촉진하는 방아쇠로서 역할을 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탈냉전기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계질서가 조금씩 움직이며 새로운 질서들이 태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물론, 여전히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다거나 재편되었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질서가 요구하는 자본에 기반한 권력이 국가권력을 무력화하고, 권력의 비도덕성을 드러내며 세계질서의 재편을 부추기고 있음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동아시아는 국가 간 빠르게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상호 의존이 심화하여 국가 간 접촉이 늘고 이해관계 역시 복잡해졌다. 이에 따라 군사 및 경제, 외교, 안보,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간 갈등도 심화하는 양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동아시아는 역사적 국면마다 나타나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

46) 하영선 편, 『위기와 복합: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1). 참조.

과거에는 전통적 안보 위기가 국가안보 또는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비전통적 안보 위기가 복합적으로 얹혀 위기를 더욱 가중하는 다중안보 위기의 시대가 도래했다. 과거는 물리력에 기반한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핵심인 전통 안보 시대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가안보는 환경 및 재해·재난, 보건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다양한 위기 촉진 요인들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위기를 고조시키고, 증폭시키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안보 위기의 다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동아시아에 남아있는 냉전 구조가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과 결부되어 안보 위기를 다중화하고, 역내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식을 찾기 어렵다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다. 동아시아에는 냉전의 산물이 그대로 남아있다. 둘로 갈라진 채 서로에게 충구를 겨누는 남북한도 있고, 중국과 대만의 대립적 구도도 있다. 또 미·소 냉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러시아는 당시와 비교하면 쇠락하긴 했으나 여전히 패권 지향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일본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뒤 전범국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역내 균형과 안정을 추구한다는 명목 아래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하고 있다. 동아시아에는 ‘한·미·일 대 북·중·러’로 대표되는 냉전적 구도와 관성이 여전히 남아 역내 역학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동아시아 다중안보 위기를 가중하는 요소는 또 있다. 북핵 문제로 대표되는 전통안보 이슈와 COVID-19로 명명된 보건 위기 및 북한이 배후로 주목되는 사이버 안보 위기 등의 비전통안보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통안보 이슈와 비전통안보 이슈가 혼재되어 나타나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이 흔들리고 있다. 전통적 안보 개념을 넘어선 신항안보 영역에서의 국가 위기 대응 능력이 국가의 역량과 능력을 드러내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으며, 초국적 협력 또는 국가 간 갈등을 이끄는 새로운 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안보와 인류의 삶은 비단 전쟁뿐 아니라 환경, 인권, 빈곤, 사이버 등 다양한 비전통적 요소로부터도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고, 개인 단위의 미시적 수준의 위협이 국가 단위의 거시적 수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만연하게 퍼져나간 상황이다.<sup>47)</sup> 이렇듯 동아시아에서는 다양한 위기 촉진 요인이 만들어 내는 복합적 위기 상황이 증첩적으로 나타나는 ‘안보 위기의 다중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나. 미·중 갈등의 지속

1972년 관계 정상화 이후 미국과 중국은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갈등 속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미·중은 지배이념과 정치체제의 현격한 차이와 지정학적 대립구조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충돌을 피해 상호의존과 공동 발전을 추구해 온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이 대중 전략의 변화를 시도하면서 미·중은 다양한 영역에서 부딪히기 시작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American First)’와 시진핑(習近平)의 ‘중국몽(中國夢)’이 충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sup>48)</sup>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미·중 무역전쟁은 미·중 패권 경쟁으로 심화하였고, 전선도 갈수록 넓어지는 형국이었다. 초기에는 무역 적자 해소를 이유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무역 갈등을 넘어 기술 분쟁과 금융, 군사, 안보 등 전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미·중 간 무한

47) 최은미,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내용, 2022.12.8.

48) 박병광, “국제질서 변환과 전략적 각축기의 미중관계,” 『국방연구』, 제57권 1호 (2014), p. 118.

대결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미·중 경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 경쟁 양상을 띠며 심화하고 있었다.

<표 Ⅲ-1> 미국과 중국의 아·태지역 패권 경쟁 양상

| 미국                                                                                                    | 경쟁영역  | 중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우선주의 강조하며, 경제·군사적 우위 유지</li> </ul>                           | 기본입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몽 강조하며, 신형국제관계 수립 추구</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내세우며 대중 무역전쟁 선포</li> </ul>                       | 경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대일로 전략 추구</li> <li>아세안(ASEAN)과 경제협력 강화</li> <li>한·중·일 FTA 추진</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며 F-35 판매 및 줌왈트 배치 등 추구</li> </ul>                | 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텔스전투기 젠-20(J-20) 실전 배치</li> <li>첫 자체 개발 항모 진수</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아·태지역 다자무대 적극 참여</li> <li>대인도 협력 강화</li> </ul> | 외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러시아와 유대강화</li> <li>대일 관계 개선</li> <li>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추진</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태평양전략’ 추진 바탕의 중국 견제 강화</li> </ul>                          | 안보 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접근거부 및 지역 거부(A2/AD) 전략을 통한 대미 개입 대응</li> </ul>                           |

출처: 박병광,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방향,” 『INSS 전략보고』, 67호 (2020), p. 3.

트럼프 행정부 당시 격화된 미·중 갈등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맡은 인물들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적대적 대치를 추구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다수 나왔기 때문이다.<sup>49)</sup> 반면, 미·중 무역전쟁과 COVID-19 팬데믹 이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미국 내·외에서 확산하면서 중국에 대한 경쟁적 혹은 적대적

49) 이왕휘, “미중 경제전략 경쟁,” 김홍규 외,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 연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p. 32.



전략을 일시에 철회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싱가포르의 동남아연구소가 실시한 “2021 State of Southeast Asia Survey”에서 상당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확장에 불안감을 느껴 미국의 개입을 원하고 있다는 여론이 확인되었다.<sup>50)</sup> 중국의 팽창에 부담을 느끼는 국가들이 그만큼 많고, 중국 주도의 세계질서 변화를 원치 않는 국가들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여가 되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현재 시점에서 살펴보면, 미·중 갈등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중국과의 ‘신냉전’은 없을 것”이라며 미·중 갈등이 대규모 질서의 충돌이나 패권 경쟁으로 격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sup>51)</sup> 하지만 이 발언은 미·중 갈등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이 애써 미·중 갈등을 충돌이 아닌 경쟁이라고 순화하고 있지만,<sup>52)</sup>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여전히 소강상태 없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철회 또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 301조 관세 역시 유지되고 있다. 물론 301조 조치가 4년 기한이 경과해 지난 7월부터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지만, 미국 내 주요 산업의 반달이 커 전면적인 철회가 쉽지 않으리라고

50) 서정경, “미중 전략적 경쟁시기 아시아의 선택은?: ‘아시아-중국대화 2021’에 나타난 각국의 입장,” 『아시아 브리프』, 제2권 8호 (2022), p. 1.

51) “Xi Biden Meeting: US Leader Promises ‘No New Cold War’ with China,” *BBC*, November 14, 2022, <<https://www.bbc.com/news/world-asia-63628454>> (Accessed December 15, 2022).

52) In recent days Mr Biden and US officials have been at pains to signal their aim of conciliation, stressing repeatedly that the US does not want conflict with China, while maintaining a sense of strong competition.

판단된다.<sup>53)</sup> 또 미·중은 2020년 1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추가 수입하는 조건을 가진 1단계 무역합의<sup>54)</sup>를 이뤄냈지만, 무역합의 이행률은 2년간 63%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산품 이행률은 78%로 비교적 높았지만, 공산품과 에너지는 이행률이 각각 63%와 47%에 그쳐 목표를 크게 밑돌았다.<sup>55)</sup> 미·중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률이 기대보다 낮아 미·중 갈등이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가 커진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낮은 이행률을 문제 삼아 추가 제재 하면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낮은 이행률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미국의 대중 제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선택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는 ‘대만’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지난 8월 3일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은 대만에 대한 봉쇄압박을 강화하고, 대만

53) 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은 관보를 통해 301조 관세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며, 최종 결정 때까지 현행 추가 관세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Federal Register, “Continuation of Actions: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August 9, 2022,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2/09/08/2022-19365/continuation-of-action-chinas-acts-policies-and-practices-related-to-technology-transfer>> (Accessed December 15, 2022).

54) 중국은 2020~21년까지 공산품 및 농산품, 에너지 등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각각 1,621억 달러, 379억 달러씩 추가 구매하여 대미 수입을 2,000억 달러만큼 늘리기로 약속하였다. USTR,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act Sheet,” December 13, 2019,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US-China-Agreement-Fact-Sheet.pdf>> (Accessed December 15, 2022);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国新办举行中美经贸磋商有关进展情况新闻发布会,” December 13, 2019, <<http://www.scio.gov.cn/xwfbh/xwfbh/wqfbh/39595/42254/index.htm>> (Accessed December 15, 2022).

55) 이유진, “미-중 무역전쟁 4년 경과 및 전망: 양국 무역비중 및 탈동조화 검토,” 『KITA 통상리포트』, 8호 (2022), p. 4.

인근 해역에서 빈번한 군사도발을 시도하고 있다. 또 남중국해 해역에서 미 해군의 항행 자유 작전에 대항하여 중국 내 해양 안보 수호를 내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패권을 지키고자 하므로 주변 해역에 걸쳐 있는 모든 나라와 갈등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sup>56)</sup> 중국의 해양 패권 장악 의도와 ‘하나의 중국’ 원칙이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연대가 강화되고, 사회주의 진영의 군사력 증강 시도 등도 미·중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이다. 미국은 지난 11월 21일 개최된 유엔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대담하게 만든다며 정면 겨냥하였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맞서 미국의 군사훈련과 대북제재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부추긴다고 비판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소집된 유엔안보리 회의가 미국 대 중·러 연합의 대결로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sup>57)</sup> 중·러의 거부권 행사는 2022년만 10차례 반복되어, 추가로 제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사용하면서 유엔안보리 차원에서의 대응이 무산되고 있다. 물론, 지금 당장 유엔안보리를 대체할 무언가를 찾기는 불가능하겠지만, 사회주의 진영의 결속이 강화되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미·중 양국의 패권 경쟁을 바탕으로 한 세계질서 재편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는 끝나지 않은 미·중 갈등으로 인해 불안한 정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56) 주민욱,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내용, 2022.12.8.

57) “북한 ICBM: 중러 ‘거부권’ 또 사용…유엔 안보리 ‘개혁’ 가능할까?” BBC, 2022. 11.22., <<https://www.bbc.com/korean/news-63633590>> (검색일: 2022. 12.16.).

## 다. 무력 도발의 공세를 늦추지 않는 북한

북한은 ‘무력 행동 원칙’을 강조하며, 무력 도발의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조선중앙TV를 통해 “한미 군사훈련에 더 강력한 군사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북한 무력의 행동 원칙과 행동 방향”이라고 소개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을 겨냥하여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압도적인 실천적 군사 조치들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는 말도 덧붙였다.<sup>58)</sup> 북한이 과거 그래왔듯이 북한의 무력 도발 명분을 한국과 미국에서 찾는 발언이다. 이 발언으로 북한이 대남, 대미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 반복적으로 시도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원거리 미사일의 타겟이 될 수 있는 미국과 근거리에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한국과 일본 모두 불안한 상황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반복되면서 역내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대위기를 촉발한다는 공식으로 귀결되고 있다.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돌발행동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통제 불가능한 변수로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를 흔드는 것이 상수에 가깝다는 점이다.

북한의 무력 도발 공세는 그 역사가 매우 길다. 6.25 전쟁 이후 북한은 대체로 지상도발 및 해상도발, 공중도발, 전자전도발 등 다양한 형태의 국지도발을 단행하였다. 연대별로 유형별 국지도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I-2>와 같다. 북한은 분단 이후 줄곧 대남 도발을 단행해 왔는데, 그 빈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남북한 간 체제 대결이

58) “미국남조선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한 조선인민군의 군사작전진행에 대한 총참모부 보도,” 『조선노동TV』, 2022.11.7.

고조되었던 1960년대였다. 1960년대 이후 서서히 줄어들었던 북한의 국지도발은 북한의 체제가 위태로웠던 1990년대부터 다시 큰 폭으로 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는 225건, 2010년대에는 23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2020년에는 1건<sup>59)</sup>으로 조사되었다. 국방백서에 나타난 국지도발은 북한의 총탄이나 포, 군인 등이 군사분계선을 직접 넘어온 도발만 집계하므로 접경지역 내의 다양한 군사적 위협을 포괄하지 못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포함하지 않는 매우 보수적 개념이다. 따라서 접경지역 내 도발 사건과 미사일 발사 등까지 포함하면 그 횟수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 Ⅲ-2> 연대별·유형별 국지도발 세부 현황

(2020년 11월 30일 기준)

| 구분        | 계     | 1950<br>년대 | 1960<br>년대 | 1970<br>년대 | 1980<br>년대 | 1990<br>년대 | 2000<br>년대 | 2010<br>년대 | 2020<br>년 |
|-----------|-------|------------|------------|------------|------------|------------|------------|------------|-----------|
| 지상<br>도발  | 503   | 7          | 298        | 51         | 44         | 48         | 42         | 12         | 1         |
| 해상<br>도발  | 559   | 2          | 22         | 27         | 12         | 107        | 180        | 209        | 0         |
| 공중<br>도발  | 51    | 10         | 7          | 15         | 4          | 1          | 3          | 11         | 0         |
| 전자전<br>도발 | 5     | 0          | 0          | 0          | 0          | 0          | 0          | 5          | 0         |
| 계         | 1,118 | 19         | 327        | 93         | 60         | 156        | 225        | 237        | 1         |

출처: 국방부, 『2020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0), p. 320.

<sup>59)</sup> 2020년 5월 3일 북한군이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의 한국군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하여, 한국군 GP 관측소 외벽에서 4발의 탄착이 발견되었다.

국방백서에서 국지도발로 집계되지 않지만, 한국과 국제사회가 가장 큰 위협으로 느끼는 북한의 무력 도발은 바로 미사일 도발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받는 동안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까지 잦은 빈도로 시도되고 있는 도발 유형이다. 특히, 북한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 도발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현황을 분석하는 일은 남북한의 주장이 엇갈리거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수 있어 쉽지 않지만,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다.

SBS가 미사일 발사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 당국이 파악한 모든 미사일 활동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북한 미사일 도발의 세부 현황은 <그림 III-1>과 같다. 북한의 공식적인 첫 미사일 도발은 1984년 4월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스커드-B(화성-5호)를 시험 발사한 것이다. 이후 북한은 구소련의 미사일 기술을 배워 개발에 착수하여 스커드-B와 스커드-C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였다. 북한은 60여 년 이상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며 도발을 병행하였다. 첫 미사일 시험발사 후 38년 동안 북한은 총 165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그림 Ⅲ-1> 북한 미사일 도발 세부 현황

(2022년 10월 15일 기준)

☢ 북한 핵실험    🚫 남한대선    🔄 정상회담

|      | 합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1984 | 1   |    |      |     | 1    |      |       |    |    |      |      |     |     | 전두환 |
| 1985 | 0   |    |      |     |      |      |       |    |    |      |      |     |     |     |
| 1986 | 1   |    |      |     |      | 1    |       |    |    |      |      |     |     |     |
| 1987 | 0   |    |      |     |      |      |       |    |    |      |      |     | 🚫   |     |
| 1988 | 0   |    |      |     |      |      |       |    |    |      |      |     |     | 노태우 |
| 1989 | 0   |    |      |     |      |      |       |    |    |      |      |     |     |     |
| 1990 | 1   |    |      |     |      | 1    |       |    |    |      |      |     |     |     |
| 1991 | 2   |    |      |     |      |      | 1     |    |    |      | 1    |     |     |     |
| 1992 | 1   |    |      |     |      |      | 1     |    |    |      |      |     | 🚫   | 김영삼 |
| 1993 | 2   |    |      |     |      | 2    |       |    |    |      |      |     |     |     |
| 1994 | 1   |    |      |     |      | 1    |       |    |    |      |      |     |     |     |
| 1995 | 0   |    |      |     |      |      |       |    |    |      |      |     |     |     |
| 1996 | 0   |    |      |     |      |      |       |    |    |      |      |     |     | 김대중 |
| 1997 | 0   |    |      |     |      |      |       |    |    |      |      |     | 🚫   |     |
| 1998 | 1   |    |      |     |      |      |       |    | 1  |      |      |     |     |     |
| 1999 | 0   |    |      |     |      |      |       |    |    |      |      |     |     |     |
| 2000 | 0   |    |      |     |      |      | 🔄 남북  |    |    |      |      |     |     | 노무현 |
| 2001 | 0   |    |      |     |      |      |       |    |    |      |      |     |     |     |
| 2002 | 0   |    |      |     |      |      |       |    |    |      |      |     | 🚫   |     |
| 2003 | 4   |    | 1    | 1   | 1    |      |       |    |    |      | 1    |     |     |     |
| 2004 | 1   |    |      |     | 1    |      |       |    |    |      |      |     |     | 이명박 |
| 2005 | 1   |    |      |     |      | 1    |       |    |    |      |      |     |     |     |
| 2006 | 3   |    |      | 1   |      |      |       | 2  |    |      |      |     |     |     |
| 2007 | 4   |    |      |     |      | 1    | 3     |    |    |      | 🔄 남북 |     | 🚫   |     |
| 2008 | 4   |    |      | 1   |      | 1    | 1     |    |    |      | 1    |     |     | 박근혜 |
| 2009 | 7   |    |      |     | 1    | ☢ 3  |       | 2  |    |      | 1    |     |     |     |
| 2010 | 0   |    |      |     |      |      |       |    |    |      |      |     |     |     |
| 2011 | 0   |    |      |     |      |      |       |    |    |      |      |     |     |     |
| 2012 | 5   | 1  |      | 1   | 1    |      |       |    |    | 1    |      |     | 🚫 1 | 문재인 |
| 2013 | 4   |    | 1    | ☢   |      | 3    |       |    |    |      |      |     |     |     |
| 2014 | 18  |    | 2    | 6   |      |      | 2     | 5  | 1  | 2    |      |     |     |     |
| 2015 | 14  | 1  | 3    | 2   | 3    | 2    | 1     |    |    |      |      | 1   | 1   |     |
| 2016 | 23  | ☢  | 1    | 6   | 5    | 1    | 2     | 3  | 2  | 1    | ☢    | 2   |     | 윤석열 |
| 2017 | 16  |    | 1    | 2   | 3    | 🚫 4  | 1     | 2  | 2  |      | ☢    |     | 1   |     |
| 2018 | 0   |    |      |     | 🔄 남북 | 🔄 남북 | 🔄 북미  |    |    | 🔄 남북 |      |     |     |     |
| 2019 | 13  |    | 🔄 남북 |     |      | 2    | 🔄 남북미 | 2  | 5  | 1    | 2    | 1   |     |     |
| 2020 | 5   |    |      | 4   | 1    |      |       |    |    |      |      |     |     |     |
| 2021 | 6   | 1  |      | 2   |      |      |       |    |    | 2    | 1    |     |     |     |
| 2022 | 27  | 7  | 1    | 🚫 3 | 1    | 2    | 2     | 1  |    | 1    | 3    | 6   |     |     |
| 합계   | 165 | 10 | 10   | 29  | 18   | 27   | 13    | 16 | 12 | 10   | 15   | 3   | 2   |     |

\* 본 자료는 홍민,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활동 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17) 및 NTI 데이터베이스, 국방부와 합참의 공식 발표, 언론 보도를 종합하여 재구성한 것임.

출처: “김정은의 미사일 정치…언제 많이 썼을까: 북한 미사일 도발 38년사 전수분석,” 『SBS』, 2022.10.1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29805&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29805&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검색일: 2022.12.18.).

〈그림 III-1〉에 나타난 북한의 미사일 도발 현황을 남북한의 정권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먼저, 북한 기준으로 살펴보면, 김정은 정권에서 131회로 가장 많은 미사일 도발을 단행하였다. 전체 미사일 발사 중 약 80%가량이 김정은 정권 시기 이뤄진 것이다. 한국 기준으로는 박근혜 정권 당시 64회로 가장 높았고, 문재인 정부 시기 48회로 뒤를 이었다. 2022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총 13회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 뒤로도 추가 미사일 도발이 시도되어 2022년 12월 21일 기준 총 39회로 집계, 1년 기준 가장 많은 미사일 활동이 있는 해로 기록되었다.<sup>60)</sup> 김정은 정권 시기 시도된 131번의 미사일 도발은 주로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봄철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시위에 가까운 성격으로 볼 수 있지만, 북한의 군사훈련 역량이 집중되는 시기이자 북한의 중요 행사일이 몰려 있는 시기로도 분석할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얼마만큼 전력을 다하고 있는지는 지난 11월 18일 김정은이 딸과 함께 화성-17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현장에 등장한 데 이어, 11월 27일 다른 ICBM 시험발사 현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북한 내 군사 과학자와 기술자, 정부 관계자 앞에 함께 등장한 김정은 부녀의 사진은 북한의 핵무장력 강화와 미사일 성능 고도화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화성-17형 ICBM에 대하여 “실전 전투에서 성능이 검증된 ‘세계 최강의 전략무기’”라며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전면

60) “북한: 올해 북한 미사일 활동 역대 최다… 내년에도 긴장 이어질까?,” BBC, 2022. 12.21. <<https://www.bbc.com/korean/news-64049399>> (검색일: 2022. 12.23.).



전에서 물러서지 말고 대응할 것을 천명하는 등 핵무기와 미사일 활용 가능성을 강조하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sup>61)</sup> 이를 계기로 전 세계는 북한을 다시 주목하였고, 한반도의 긴장 또한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이다. 김정은 부녀의 ICBM 시험발사 참관은 국가안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북한은 강력한 무기를 기반으로 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대를 이어 무력 강화를 이뤄낼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향후 무력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전 세계에 발산한 것이다.

비록 처음에는 실패하였지만, 보름이라는 짧은 기간 내 상승고도 6,040.9km, 비행거리 999.2km의 ICBM 시험발사를 성공한 북한은 주변으로부터의 군사 위협과 국가 수호를 위한 유일한 선택지가 핵·미사일 무기를 소유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이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지속하면, 그 반발로 미사일 개발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은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는데, 대북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 군사적 충돌 역시 배제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다.<sup>62)</sup> 만약 현재와 같이 동아시아 지역 내 한미, 한일 간 전략적 동맹관계가 강화되고 육·해상에서의 군사 연합훈련이 지속된다면, 북한의 무력 도발은 더욱 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61) 화성-17형 시험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초강력적이고 절대적인 핵억제력을 끊임없이 제고함에 관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최우선 국방건설 전략이 엄격히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 무력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진행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22.11.19.

62) 주민육,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내용, 2022.12.8.

## 라. 동아시아 정세 종합 분석

2022년 동아시아 정세를 요약하면, 미·중의 패권 경쟁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지속되는 북한의 무력 도발, 포스트 COVID-19 시기의 경제 불안정성 심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이 중 일부 문제는 2022년 만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올 한해 동아시아 안보 정세가 불안정해졌으며, 불안정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이 같은 동아시아 정세의 불안정성 확대는 글로벌 안보 정세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국·러시아를 필두로 한 권위주의 국가들의 연합이 전개되면서 동아시아의 안보 불안정성을 보다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sup>63)</sup>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국가 연합 간 대결 구도가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대 북·중·러 대립 구도의 양상으로 심화하여 나타나고 있다.

2022년 미국과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상호 불신이 깊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경제 분야뿐 아니라 외교 분야에서도 중국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0월 12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을 세계질서를 유일하게 변경할 수 있는 중요한 외부 도전국으로 인식하며,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유일한 경쟁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 미국은 향후 10년 동안 미·중 전략경쟁에 집중할 것을 선언하며, 동맹국 및 협력국들과 연대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가치 중심 연대의 승리를 이끌겠다는 계획도 내놨다.<sup>64)</sup> 미국이 중국을 가장 중대한 위협

63) 이성훈,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내용, 2022.12.8.

64)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ctober 2022,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

으로 인식하고 있음은 지난 10월 7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내놓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수출통제 조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sup>65)</sup> 이렇듯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면서 자국 중심의 첨단기술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움직임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미국과 중국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미·중 간 ‘신냉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sup>66)</sup> 하지만 미국의 행보를 보면, 미·중 갈등의 봉합을 예단하기는 선부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5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순방을 통해 중국 견제에 박차를 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을 규합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선언하였다. 또 쿼드(QUAD)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위압적이고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중국을 압박하기도 하였다.<sup>67)</sup> 이뿐 아니라 8월 초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해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미·중 간의 갈등과 충돌 가능성은 지속해서 점증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동아시아 안보에 영향을 미친 다음 사건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꼽을 수 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300일이 지났지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쟁 초반 러시아의 공세가 거셌지만, 우크라이나의 저항으로 수도 방어에 성공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변화되는

---

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Accessed December 20, 2022〉.

65) 산업통상자원부, “(참고자료) 美 상무부,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조치 발표,” 2022.10.8.,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6139&bbs\\_cd\\_n=81&curren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6139&bbs_cd_n=81&curren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 (검색일: 2022.12.17.).

66) “미중 정상회담: 바이든, 중국과 ‘신냉전 없을 것,’” *BBC*, 2022.11.15., 〈<https://www.bbc.com/korean/news-63632939>〉 (검색일: 2022.12.23.).

67) 이성훈,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내용, 2022.12.8.

모습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의 역할이 컸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은 전쟁 전부터 러시아에 대해 경제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강력히 경고하였다. 이뿐 아니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전쟁 발발 후 10월 14일까지 총 176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군사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초기 러시아의 대규모 공세를 극복하고 반격하여 주도권을 되찾는 데 이바지하였다. 또 미국은 강화된 동맹 체계를 활용하여 러시아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68)</sup> 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정치·경제·군사적 차원에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력 대 러시아와 중국 중심의 본격적인 대립 구도를 형성한 것이다.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은 무력 도발을 지속하였다. 북한은 2022년 외부와의 접촉을 일체 차단한 채 미사일 발사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다. 올 한해만 8발의 ICBM을 발사하였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40회에 걸쳐 최소 65발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sup>69)</sup> 역대 최고 수준의 발사 빈도였으며, 미사일의 종류와 발사 방식도 다양한 것이 특징이었다. 북한의 ICMB 발사가 추가로 이루어졌는데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추가 경제제재는 무산되었다. 앞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진영 간의 대결 양상이 북핵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진영 간 대립과 전략적 연대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9월 8일 기존 핵관련 법적 지침인 「자위적

68) 최우선,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전략』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2), pp. 9~14.

69) “[2022 연말기획] 1. 북한, 전례 없는 미사일 발사…‘선제공격’ 명문화로 긴장 고조,” VOA, 2022.12.26., <<https://www.voakorea.com/a/6889960.html>> (검색일: 2022.12.27.).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를 폐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새롭게 제정해 발표한 것은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분석된다. 새롭게 발표된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는 핵무기를 방어적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입장을 뛰어넘어 적의 침략과 공격기도 격퇴와 보복 타격을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sup>70)</sup> 이러한 북한의 핵 사용의 목적 확대는 핵 위협을 가속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애초 동아시아는 COVID-19 팬데믹 공포에서 벗어나면서 실물경기 측면에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연초 COVID-19 재확산과 지정학적 불안 증가, 인플레이션 심화, 금융긴축 등의 영향으로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불안은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켰고, 서방의 긴축 정책에 따른 수요 부진은 세계경기 부진으로 이어졌다.<sup>71)</sup> 2022년 하반기 세계 경제 성장률은 정책 전환기의 불확실성에 따라 전망치 대비 1.1%p 하향 조정된 3.5%로 전망됐다.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은 공급망 교란과 수급불균형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커지고, 포스트 COVID-19 이후 경기회복과 물가안정 사이의 딜레마로 통화정책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경기회복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도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경기회복세가 둔화하였다. 하지만 아세안 5개국은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내수 회복과 수출 확대 등으로 COVID-19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하는 모습이었다.<sup>72)</sup> 한국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 경

70) 이승현, 『북한 핵무력 법제화의 함의와 대응 방향』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22), pp. 1~2.

71) 산업연구원, 『2022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세종: 산업연구원, 2022), p. i.

72) 안성배, “2022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22권 8호 (2022), pp. 2~4.

제는 COVID-19 위기를 비교적 효과적으로 극복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 다소 경제성장이 더딘 모습을 보였다.

2022년은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정치에서 신냉전 구조가 고착화하는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공급망구조 재편과 탈동조화 과정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상호의존에서 상호결별의 시대로 나아가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신냉전 시대'로의 진입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sup>73)</sup> 종합하면, 2022년 동아시아 정세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결 구도가 공고화되고, 북핵 위협 증대와 경제 불안정성 확대로 인한 안보 불안 심화의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 2. 동아시아 다중안보 위기의 분화(噴火) 가능성

동아시아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안보 위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2022년 나타난 안보 불안정 요인들은 개선될 여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향후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거나 혹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중 패권 경쟁은 해소될 가능성보다 심화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 두 요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국-러시아가 중심이 된 권위주의 진영 간의 대결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대만해협에서의 미·중 갈등과 북핵 위협의 고조도 진영 간 대립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COVID-19로 인한 경제 문제도 공급망 불안과 인플레이션 압박, 통화정책의 한계 등으로 인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물론, 동아시아의 다중안보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

73) 이성훈,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내용, 2022.12.8.

대수롭지 않게 평가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국제정치에서의 ‘신냉전 시대’로의 전환 시그널은 동아시아 다중안보 위기의 분화 가능성을 높이기에는 충분하다. 미국 역시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체제경쟁에서 향후 10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sup>74)</sup> 중국도 지난 10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미국에 대한 양보 없는 경쟁을 지속할 것과 대만 통일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sup>75)</sup> 미·중 양국이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등 전 영역에서 질서 경쟁을 지속한다면, 국제정세는 물론 동아시아 정세 역시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2023년에도 중국에 대한 대립과 경쟁적 접근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도-태평양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 주도의 쿼드, AUKUS, 파이프 아이즈(Five Eyes: FVEY), 칩(Chip)4 등을 통해 안보·경제 영역에서 중국 견제를 시도할 것이다.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활동반경을 확장하고 있는 NATO와의 연대를 통해 중국 견제를 강화할 것도 예상된다. 반면, 중국은 러시아 및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유인을 활용하여 유럽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국가들의 탈미(脫美) 노선을 유도해나갈 전망이다.<sup>76)</sup>

중국이 COVID-19 이후 경기 하강 압력을 크게 받고 있어 경제적 유인을 활용한 주변국들의 탈미 노선 유도가 얼마나 유효할지는 미지수이다. 중국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 신형인프라 건설 및 기업투자 확대 등의 경기부양책을 현재 계획보다 강하게 추진

74)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75) “시진핑 3기 ‘美와 경쟁 끝까지 간다’…시험대 오른 韓中외교,” 『서울신문』, 2022.10.2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24500272>> (검색일: 2022.12.10.).

76) 이성훈,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내용, 2022.12.8.

하고자 하지만, 2022년 경제 성장률은 양회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중국은 여전히 COVID-19에 대한 높은 방역 강도를 유지하고 있어 추후 COVID-19 재확산 조짐이 발생할 시, 경제 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제2, 제3의 COVID-19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중국은 군사력 증강과 군사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므로 미·중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하면, 최소 향후 몇 년간은 미국과 중국은 상호 간의 견제를 늦추지 않은 채 압박 수위도 높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유일한 질서 경쟁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본격적 견제 의도를 밝힌 상황이고,<sup>77)</sup> 시진핑 3연임 체제를 공식화한 중국은 이에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어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갈등이 첨예해질 전망이다. 지난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신냉전 시대'의 돌입 가능성을 일축하며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충돌 혹은 마찰 가능성 자체가 소거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등 미·중이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고관여 정책으로 변경한다면, 미국과 또 다른 갈등을 빚을 수 있다. 이뿐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를 강화하고, 미국과 대립 관계를 공고히 한다면,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경제 안보 환경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끝나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동아시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러시아군의

---

77) 미국은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서(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 방어검토보고서(MDR) 등의 주요 보고서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이자 '가장 중대한 도전' 등으로 표현하며, 미국 국가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였다.



패배와 후퇴가 반복되는 상황이지만,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전쟁을 길게 끌고 가려는 모습이다. 국제사회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핵전쟁 위기’를 직접 거론하며 방어와 반격을 위해 핵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sup>78)</sup>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은 미국과 NATO의 추가적 개입을 견인할 수 있고, 북한을 자극할 수 있어 위험하다.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은 향후 북한의 핵 위협 수준을 더욱 공세적으로 만드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을 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중심의 국가안보전략을 유지하고, 러시아의 국력을 약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유럽에 대한 과도한 관여를 피했다. 이러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2023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영토 문제를 둘러싼 러·우 전쟁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중국과의 장기적 전략경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군사 혁신을 가속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미래전력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다. 또 아시아에서 군사태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첨단전력의 아시아 배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sup>79)</sup> 이뿐 아니라 미국은 역내에서 양자 또는 다자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와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다른 참여국들의 단합과 연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연대 강화가 경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냉전적 대결 구도가

78) “‘본토 피격’ 푸틴 또 핵위협…미국, 우크라에 선긋기,” 『연합뉴스TV』, 2022.12.8.,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21208008800032>> (검색일: 2022.12.20.).

79)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3 국제정세 전망』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2), pp. 44~45.

굳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고, 양국 모두 군비경쟁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중·러 관계를 연대를 넘어서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부담을 지니고 있어 양국이 동맹을 형성해 미국에 도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동맹인 일본은 미국과 달리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있고,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 수입을 지속하며 대러 관계를 관리하고 있다.<sup>80)</sup> 즉,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주변국 모두 냉전적 대결 구도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미·중은 진영 내 연대를 추구하며 갈등 관계를 지속하겠지만, 일정 정도 수준의 협력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정세 안정의 또 다른 핵심 이슈인 북한 문제이다. 북한은 2022년에도 핵·미사일 능력 증강에 온 힘을 쏟고, 핵전쟁 수행 전략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COVID-19 상황으로 경제 상황 전반이 어려워졌지만, 북한은 핵·미사일 역량 제고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핵·미사일 역량의 고도화가 한반도에서의 대규모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을 겨냥해 제한적, 국지적 군사도발을 단행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더욱이 2022년 단행한 미사일 시험발사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하기 위해 도발을 지속한다면,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향후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세계 경제 침체, 대만해협에서의 미·중 갈등 등으로 미국의 집중력이 분산되는 상황을 이용해 핵무기의 소형화와 경량화, ICBM의 기술적 완성도 달성 등을 목적으로 전략 도발을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남북 및

80) 위의 글, pp. 47~48.

북미 대화 재개 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체제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서라도 공세적 무력 도발은 필요하기 때문이다.<sup>81)</sup>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은 크지만, 중국이 북핵 문제 관련 추가 대북제재에 반대하며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어 북핵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 모색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앞서 언급했다시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까지 더해져 역내 군비경쟁은 가속화될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군비경쟁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첨단전력 개발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sup>82)</sup> 역내 국가들의 군비 증강은 상호 간의 안보딜레마를 심화시켜 역내 안보 환경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전통적 안보 위협뿐 아니라 공급망 불안,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환경 안보, 사이버 안보, 감염병 등 비전통 안보 위협 요인들도 동아시아 정세를 더욱 어지럽게 만들 것으로 예측된다. 공급망 문제는 COVID-19 이후 경제 안보 분야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문제인데, 향후 미·중 중심의 양 진영 사이의 배타성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또 첨단기술 분야도 공급망 문제와 유사한 특성이 있어 진영 간 공조가 공고하게 나타날 수 있다. 물론, IRA의 전기차 보조금 사례와 같이 공급망 문제나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진영 내 국가 간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비전통 안보 위협 요인들의 경우, 전통 안보 위협 요인들과 맞물려 있고 미·중의 패권 경쟁의 전략적 목표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진영 간 공조가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환경 안보와 사이버 안보, 감염병의 경우, 진영 간 공조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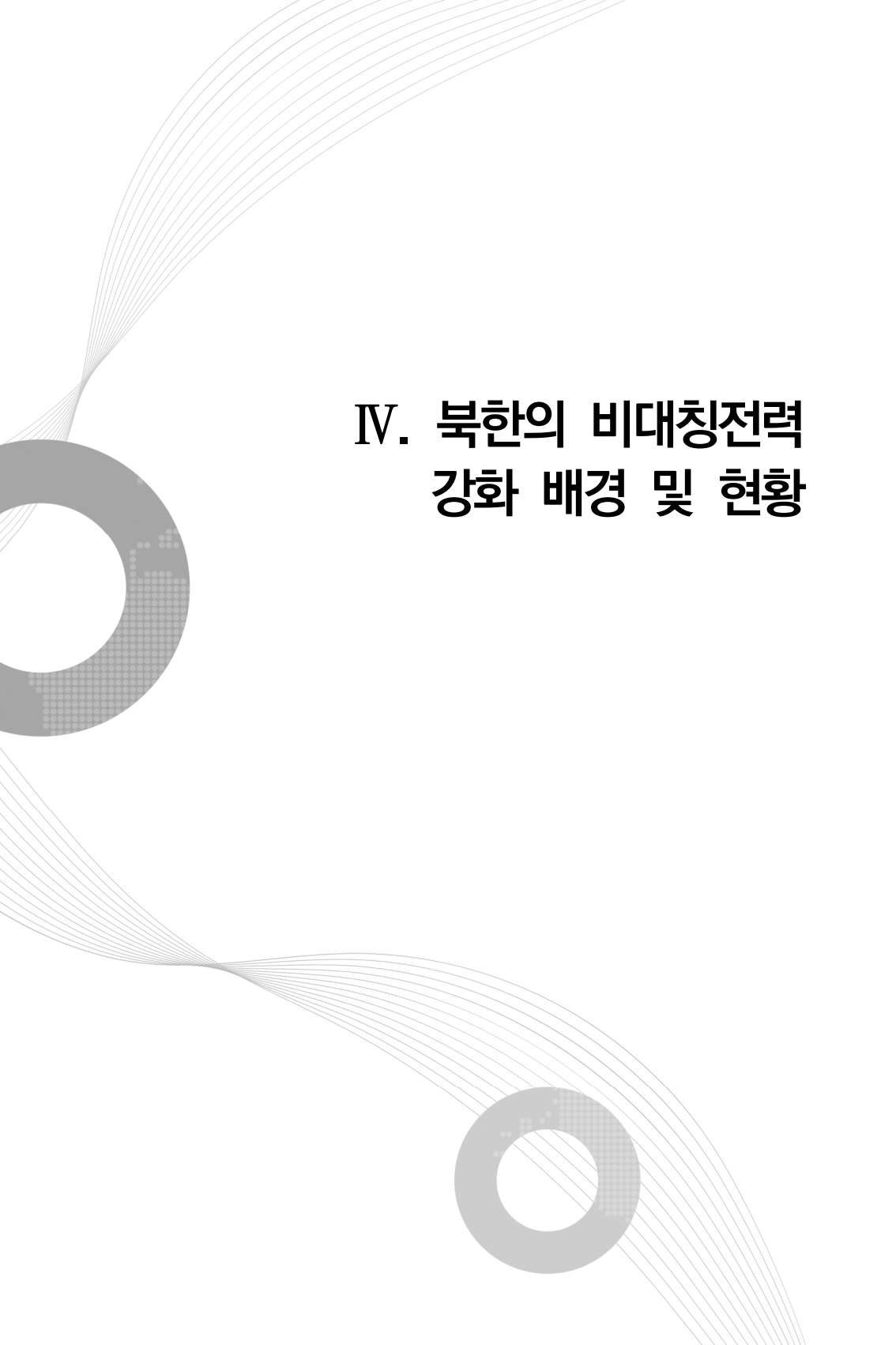
81) 이성훈,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내용, 2022.12.8.

82) 미국은 차세대 전략폭격기인 'B-21'를 비롯해 포드급 항모의 추가 확보, 오하이오급 잠수함(SSBN)을 대체하기 위한 콜롬비아급 잠수함(SSBN)과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해·공군력 현대화와 첨단무기 개발, DF-21, DF-26 등 미 항모 접근거부를 위한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을 중심으로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니라 전 세계적 공조와 전략적 연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크다. COVID-19 팬데믹을 겪으며 세계 각국은 일부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비전통 안보 이슈에 대한 연대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또 환경문제나 사이버 안보 문제 역시 국가 간 대결이나 경쟁 구도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전 지구적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한 바 있기 때문이다.

향후 동아시아 정세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미·중은 세계질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상호 견제하기 위해 경쟁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중 양국 모두 양자 및 다자협력 체계를 정비하여 동일 진영 내 국가 간 연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제정치적 상황 속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도 심화할 것이다. 또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군비경쟁은 심화할 것이고, 비전통적 안보 위협도 증가하여 동아시아 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더욱이 당분간 진영 간 협력을 이끌만한 요인이 없고, 세계적인 경제 침체 위기로 국가 간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2023년, 한국은 미·중 양국으로부터 양자택일의 압박을 높은 강도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외교 전략적 선택을 어렵게 만들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한국의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은 흔들림 없이 강화하고 미국과 전략적 구상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전략적 선택지를 늘리기 위해 한국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인도와 호주, 아세안 국가들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또 다양한 안보 이슈에 획일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다중안보 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 구상을 도출해야 한다.

A decorative graphic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It features a large, light gray circle with a smaller, darker gray circle inside it. The space between the two circles is filled with a fine grid of small dots. From the top and bottom of this circular structure, several thin, curved lines extend outwards, creating a sense of movement and flow.

## IV. 북한의 비대칭전력 강화 배경 및 현황



## 1. 북한의 비대칭전력 강화 배경

북한이 어떤 배경으로 비대칭전력을 강화하였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북한은 크게 3가지 요인-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요인-으로 인해 비대칭전력을 강화하였다.<sup>83)</sup> 먼저,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요인이다. 북한은 냉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권과 체제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 북한은 ‘강성대국’ 전략과 ‘선군정치’를 통해 체제 존립 위기를 타파해나가기 위해 비대칭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요인이다. 북한 경제는 ‘경제의 군사화’로 구조화되었으며, 이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국가 예산 중 큰 비중을 국방 분야에 할당해온 북한은 저비용 고효율의 비대칭전력을 통해 과도한 국방비 부담을 줄여 국가 경제를 회복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마지막은 군사적 요인이다. 6.25 전쟁 당시 패인을 상세하게 분석한 북한은 미군 증원군의 도착 이전에 전쟁을 종결시키고자 속전속결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군사전략을 기본으로 고수하고 있다. 전시에 속전속결로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뿐만 아니라 무기 현대화, 생화학 등 대량 살상이 가능한 비대칭전력, 즉 무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속전속결식 군사전략과 미국 대응 목적 대량 살상을 위한 비대칭전력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왜 비대칭전력 강화에 집중하는지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배경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83) 최선만,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p 47~54.

## 가. 정치적 요인

냉전 종식 이후 소련과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은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우호·협력관계를 이전 대비 활발하게 발전시키는 한편, 북한에 대한 지원은 줄여나갔다. 이 시기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체제 전환을 피하며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세계적 변화의 흐름은 공산 독재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을 국제적 고립 상황에 놓이게 하였다.

북한은 급변하는 국제정치 및 외교 환경 속에서 체제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 1992년 2월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만으로는 체제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한 북한은 1993년 3월 13일 핵확산 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탈퇴를 선언하고, 핵 보유를 통한 체제 생존 방식을 택하였다. 이후 북한은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과 비대칭전력 강화로 벼랑 끝 전술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통제 및 대응하기 어려운 무기체계 보유를 체제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협상카드로 사용하려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대내적 정치환경을 고려한 비대칭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실현 가능성 자체는 낮지만, 북한 정권은 내부 반란 세력에 의한 쿠데타나 주민들의 시장화 및 충성심 하락 등 대내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로써 북한은 대내적 체제 전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킬 수 있는 대남 군사도발을 꾸준히 일으키고, 체제결속을 다지기 위해 군사력 증강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다. 즉, 북한은 대내외적 정치환경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대량살상무기 등 비대칭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북한의 강성대국론과 선군정치 이념도 비대칭전력 강화



의 또 다른 배경이 되었다. ‘강성대국론’은 김일성 사후 3년간 유훈 통치를 한 김정일이 1998년 9월 정권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내세운 북한의 새로운 비전과 국가 목표였다. 이 강성대국론은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동원의 정당성과 결속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였다. 북한은 정치사상 강국과 군사 강국을 이루고 경제 강국을 실현한다는 단계적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선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였다. 즉, 선군정치 이념의 당위성을 강화한 것이다. 북한은 군사력 강화를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통치 논리를 설파하며, 다양한 군사 전력 중 핵무기를 포함한 비대칭전력 강화로 국제정치·외교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회복을 이룩하고자 하였다.

## 나. 경제적 요인

북한은 전 세계적인 탈냉전 분위기 속에서 1994년 김일성 사망으로 체제 생존 위기에 직면하였다. 고난의 행군으로 일컬어지는 경제난에 자연재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는 와중에 동구권 붕괴로 인한 대외 지원이 단절되면서 식량난과 외화난, 에너지난, 원자재난 등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위기는 대량 탈북 사태를 초래하였고, 암시장과 밀무역, 부정부패 등 경제·사회적 일탈 현상을 가속하였다. 북한의 경제위기 상황은 오랜 시간 지속되었지만, 북한은 군사 중심의 경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북한 사회 전반을 지배하던 ‘경제의 군사화’는 군비 충당을 위한 주민들의 부담을 증대시켰고, 민수자원 공급을 위축하여 민간에 대한 합리적 투자를 저해하는 등 북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sup>84)</sup>

하지만 북한은 만성적인 물자 부족과 낮은 생산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포기하지 않았다.

84)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북한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16), pp. 106~107.

당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못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를 받아 경제가 더욱 쇠락하고 회복력마저 잃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국가 예산 중 많은 부분은 국방 분야에 쏟아부었다.<sup>85)</sup> 오히려 예산 제약의 상황 속에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체제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비대칭전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이 비대칭전력 증강에 집중하게 된 또 다른 원인으로는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 증대를 들 수 있다. 6.25 전쟁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북한이 한국보다 경제력 측면에서 우세하였다. 북한이 풍부한 자원과 중화학공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 한국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을 본격 추진하면서 한국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여 1970년대 후반 이후에는 한국이 북한 경제를 완벽히 추월하기에 이르렀다.<sup>86)</sup> 한국은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경제개발 정책을 전개하며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과 선군정치를 기치에 걸고 군사력 강화를 우선 추진한 것이다. 당시 북한은 경제력 약화로 재래식 무기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지자 대남 군사력 우위 확보를 위해 비대칭전력 강화를 채택하였다.<sup>87)</sup> 이 과정에서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더욱 벌어졌고,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 노력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85) 북한의 예산지출 항목은 인민경제비, 인민적 시책비, 군사비, 국가관리비 등 4가지로 구성된다. 북한의 예산 규모는 1996년 이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국방비는 통상 12~17% 안팎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국방비 성격의 지출 중 일부 자료는 다른 예산지출 항목에 포함되어 실제 국방비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문성민, 『북한 재정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 (서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4), pp. 17~21.)

86) 양문수, “기획특집\_광복, 분단 70년 그리고 통일: 분단 이후 남북한 경제의 궤적,” 『현대사광장』, 제5권, (2017), pp. 44~52.

87) 김석호, “북한의 비대칭 군사위협과 효과적인 대응방안 연구,”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당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p. 48~49.

## 다. 군사적 요인

북한은 남북 분단 이후 한반도 적화통일 전략을 단 한 번도 포기한 바 없다. 북한은 당 규약에도 명시된 한반도 적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1962년 12월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민 경제 발전이 제약받더라도 국방력을 우선 강화할 것을 결정하였다.<sup>88)</sup> 이때 선포된 ‘4대 군사노선’은 북한 군사력 증강의 근간이 되었으며, 북한을 병영국가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북한은 경제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에 제약이 있음을 알면서도 국방공업 발전에 과감히 투자하였다. 심지어 김일성은 1965년 신년사에서 “정세 변화에 대응하고자 국방력 강화에 힘쓰면서 경제 발전이 지연됐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군사비 투입 증대를 멈추지 않았다.<sup>89)</sup>

북한이 이렇듯 군사력 증강 우선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다양할 것이다. 1962년 들어 북한과 소련 간의 관계가 악화한 탓일 수도 있다. 당시 북한은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소련의 지원 없이 한국을 침공해 혁명화할 군대를 만들고자 하였기 때문이다.<sup>90)</sup> 이도 아니면 6.25 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미군의 위력을 확인한 탓일 수도 있다. 실제로 북한은 인천상륙작전의 경험 후 미국의 증원군 도착 전까지 전쟁을 종결시키는 ‘속전속결 전략’<sup>91)</sup>을 기본 군사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국과 전쟁이 치러질 경우, 미군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

88)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3), pp. 157~159.

89) “김일성 수상의 신년사,” 『노동신문』, 1965.1.1.

90) “[란코프] 4대 군사노선의 탄생 배경,” 『자유아시아방송』, 2019.12.12., <<https://www.rfa.org/korean/commentary/lankov/alcu-12122019090114.html>> (검색일: 2022.12.10.).

91) 속전속결 전략이란 전쟁 의지를 조기에 말살하여 우방군 지원 이전 전쟁을 종결하고자 우세한 전투력을 바탕으로 적국의 지상군 주력을 섬멸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김석호, “북한의 비대칭 군사위협과 효과적인 대응방안 연구,” pp. 49~50.

는 사실을 인정하고 미국의 개입 이전 전쟁을 종결하는 데 집중한 결과이다. 따라서 북한은 전쟁 발발 초기에 기습공격을 단행하거나, 비대칭전력을 통한 주도권 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6.25 전쟁의 경험으로 한국과의 군사력 대결을 상정할 때, 한국의 동맹인 미국의 군사력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본격적 개입이 이뤄지기 전 승기를 굳히고자 비대칭 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북한이 경제난 이후 북한 내부의 위기 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선군정치 강화와 강성국가 건설론을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sup>92)</sup> 북한은 이미 격차가 벌어져 따라잡기 어려워진 경제 분야에서 우위를 찾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수월하다고 판단한 비대칭전력 분야에서 한국을 압도하고자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국제규범을 지키며 경제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는 한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린 것일 수 있다. 현재 북한은 더욱 공격적으로 WMD, 특수전 부대 양성, 생화학무기 고도화, 사이버 전력 육성 등 비대칭전력 증강 전략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 2. 김정은 시대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 정책

### 가. 김정은 시대의 군사전략 분석

북한은 주체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삼는 수령독재체제이며, 조선로동당에 의해 지배되는 일당체제이고, 국가정책에서 군사 분야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대한 병영으로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체제 생존과 전쟁 수행 체계를 갖추기 위해 경제 발전이 필요하고, 우수한 군인을 배출하기 위해 교육을 시행하고, 지도부에 대한 절대복종과 충성을

---

92)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북한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12), p. 33.

강요하는 병영국가인 셈이다. 북한은 고유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체제 유지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김정은 시대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태생적 속성에 가깝다.

김정은 시대 달라진 군사전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시대만이 가지는 독특한 행보를 면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핵심적인 국가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1년 1월 5일~12일까지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전략적 노선으로 채택하였다. 김정은 시대를 두고 일부에서는 국제적 인정과 정권 생존, 경제 개선, 한반도 통일 등을 국가 전략의 목표로 두고 있다고 이야기한다.<sup>93)</sup> 하지만 김정은이 보여주는 행보를 바탕으로 국가 전략을 추정해 보면, 정권의 생존 및 체제 유지, 핵 보유에 기반한 강성국가, 경제난 타개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전략 아래 김정은 정권은 군사전략 또한 수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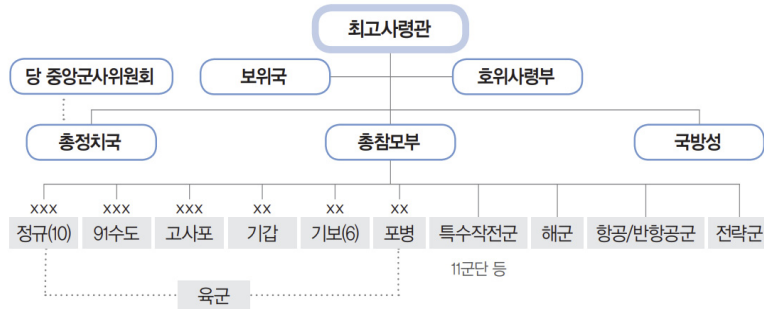
2012년 출범한 김정은 정권은 주요 전력 및 무기체계, 부대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군사지휘기구도를 김정일 시대와 비교해보면, 지휘체계나 부대구조 자체에서 큰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 김정일 시대 군사전략이 대폭 변화된 이후, 김정은 시대에는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편이 더 옳은 표현일 것이다. 김정일 시대에는 주요 무기체계와 부대구조 및 배치에서 뚜렷한 변화가 식별되었는데, 김정은 시대에는 김정일 시대에서 변화된 군사력을 고도화, 정밀화하여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그림 III-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구 미사일지도국을 전략로켓트사령부로 개편하

---

<sup>93)</sup> Charles L. Kern, *North Korea's Asymmetric Warfare Strategy: The Critical Role of Nuclear Weapons in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Saint Louis, Missouri: Webster University, 2018), p. 6.

였다가 군종 성격의 전략군으로 승격시킨 사실이 확인된다.<sup>94)</sup> 핵무기 개발과 ICBM급 전략미사일 개발, 작전 배치를 대비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격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군도 항공 및 반항공으로 개편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1>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



\* xxx: 군단, xx: 사단  
출처: 국방부, 『2020 국방백서』, p. 24.

<그림 IV-1>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정찰총국 산하에 사이버전지도국(121국)과 해킹 및 사이버전 전담 부대를 운영 중이며, 총참모부 산하 지휘자동화국에서 해킹 및 군 관련, 지휘통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공국에서 군 상대 온라인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사이버 부대 규모는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해킹조직과 지원조직을 합쳐 약 6,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북한의 사이버 부대는 김정은 시기 구성된 것은 아니다. 북한은 1991년 걸프전이 미국 주도 하의 다국적군 승리로 끝나면서 전자전의 중요성을 이미 인식하였다. 이에 북한은 총참모부 직속의 지휘자동화

94) 국방부, 『2014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4), p. 25.

국과 각 군단에 전자전 연구소를 신설하고, 대전자전 전력 증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sup>95)</sup> 북한은 국방위원회와 최고사령부의 명령으로 각급 부대에서 군사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첨단 정보기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각급 영재학교에서 배출된 영재들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기술대학, 함흥과 평양 컴퓨터기술대학, 미림대학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사이버전 부대를 신설하거나 개편하였다. 북한은 사이버 전력을 노후화된 재래식 무기와 군사 장비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력으로 판단하고, 그에 걸맞은 사이버 전략 수립과 인재 양성, 부대창설에 집중해 왔다.<sup>96)</sup> 김정일 정권은 『학습제강』을 통해 “현대전은 고도로 확대된 입체전, 정보전, 비대칭전, 비접촉전, 정밀타격전, 단기속결전으로 특징되는 싸움이다”라고 강조하며 새로운 방법에 기반한 전쟁 준비를 강조하였다.<sup>97)</sup> 이러한 북한의 군사전략은 김정은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 군사전략은 김정일 시대와 비교할 때, 전략 기초에서는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다만, 내용과 방법적 측면에서는 일부 변화가 포착되었다. 첫째, 북한은 북한이 가진 재래식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고자 핵무기와 미사일, 화학·생물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여 남북한 간의 전투력 균형을 무의미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둘째, 기습, 속도, 화력우위, 공포, 배합으로 특징지어지는 신전격전 개념의 기습공격 전략을 위해 부대구조와 배치를 크게 변화시켰다. 주요 전력을 대규모 군단급 포병 부대와 전차 및 기계화 부대를 사

95) 송재익, “한국군 합동 사이버작전 강화방안 연구: 합동작전과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군사』, 제2호 (2017), pp. 158~159.

96) 김홍광, “특별기고: 북한의 정보전 전략과 그 수행방법,” 『군사논단』, 제67권 (2011), pp. 263~284.

97) 조선인민군,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자기 부문의 싸움준비를 빈틈없이 완성할데 대하여,” 『학습제강』 (군관, 장령용)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6), pp. 26~27.

·여단 단위 또는 그 이하로 개편하여 속도와 생존성을 증가시킨 것이다.<sup>98)</sup> 쉽게 말해 일순간의 결정적 공격으로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셋째, 비대칭전력과 배합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전군에 정보병화지시를 하달하여 특수전 병력을 약 20만 명까지 증가시켰다. 정규전과 유격전을 배합하여 후방지역에 제2전선을 형성, 전후방 동시 전투 전개로 한국군의 전쟁 수행 의지와 역량을 파괴하기 위함이다.<sup>99)</sup> 배합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수전부대를 필요한 시간, 특정 장소에 침투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잠수정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sup>100)</sup>

## 나. 북한 노동신문으로 확인하는 북한의 비대칭전력 역량 분석

북한 노동신문은 북한의 주요 정책 및 지도자의 통치 행위가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보도된다. 따라서 북한의 노동신문 보도 내용을 분석하여 김정은 시대 북한의 비대칭전력 역량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실제로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등의 비대칭전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으며,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얼마만큼의 수준까지 올라왔는지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핵탄은 기술개발이 문제지, 제조 비용은 적은데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하고,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에 두려워하고 있다”<sup>101)</sup>라고 말할 정도로 비대칭전력의

98) 김기호,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의 군사전략 변화,” 『함동군사연구』, 24호 (2014).

99) 송세관, “북한 군사전략의 변화와 한국군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군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p. 81.

100) 황순필, “김정은 정권의 군사전략 변화 연구,”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pp. 94~95.

101)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에 관한 중앙연구토론회 진행,” 『노동신문』, 2013.5.1.



로서 핵무기가 지니는 가치에 대해서도 비교적 정확히 인지하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전이나 특수작전부대, 생물·화학무기 등의 비대칭전력에 대해서는 역량을 평가할만한 내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이버전과 관련하여 북한은 주로 노동신문을 통해 사이버전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와 관련하여 미국을 비난하는 행태를 보였다.<sup>102)</sup> 또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사이버전에 관한 관심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사이버전 역량 강화 추세 등에 대한 보도도 함께 내놓는 정도였다.<sup>103)</sup>

북한이 구체적으로 사이버전과 관련한 자신들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었으나, 2015년 2월 4일자 노동신문 보도에서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환장이 된 날강도 미제는 기필코 중국적멸망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사이버전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밝혔다. 아래는 해당 보도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미국이 상용무력에 의한 침략전쟁을 강요한다면 우리 식의 상용전쟁으로, 핵무력에 의한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식의 핵타격전으로, 싸이버전에 의한 《붕괴》를 시도한다면 우리 식의 령활한 싸이버전으로 미국의 최종멸망을 앞당겨오자는것이 우리의 단호한 선택이다. 소형화, 정밀화, 다종화된 핵타격수단을 포함한 우리의 지상, 해상, 수중, 공중, 싸이버전수단들은 날강도 미제가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최강의 정신력과 불굴의 사상의지, 인류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주체적인 전략전술과 독특한 전법에 의하여 적용된

102) 대표적으로 다음의 기사가 있음. “해킹문제로 불거지는 비난전”, 『노동신문』, 2014.6.24.; “남잡이가 제잡이로 될수 있다”, 『노동신문』, 2016.3.5.; “《방위》의 간판밑에 추구하는 범죄적목적”, 『노동신문』, 2016.4.3.; “누가 싸이버공간의 군사화를 부추기는가”, 『노동신문』, 2018.1.12.

103) 대표적으로 다음의 기사가 있음. “국가간 대결장으로 되여가는 싸이버공간”, 『노동신문』, 2019.7.16.; “《새로운 전선》으로 되고있는 싸이버공간”, 『노동신문』, 2019.10.12.

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sup>104)</sup>

물론, 2015년 2월 4일 보도 이전에도 북한 당국은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북한의 사이버 역량을 소개한 바도 있다. “북한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붉은별’이 북한의 정보화, 사이버 방위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기도 한 것이다.<sup>105)</sup> 하지만 북한이 사이버전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한 뒤 관련 보도는 약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온라인 국제프로그래밍 경연대회인 ‘코드셰프(Codechef)’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을 소개하는가 하면,<sup>106)</sup> “북한의 자위적 국방력은 지상, 해상, 수중, 공중, 사이버공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민족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할 준비를 갖추었다”며 사이버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sup>107)</sup> 하지만 사이버전 역량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북한은 2014년 12월 발생한 한국의 수력원자력(주)에 대한 사이버테러 사건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자 불쾌감을 드러내며, 악성코드, IP주소, 해커 근거지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방식으로 반박하기도 하였다.<sup>108)</sup>

반면, 비대칭전력의 또 다른 유형인 미사일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013년 3월 29일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로켓트군 화력타격임무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한 모습이나,<sup>109)</sup>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전술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지도하는

104)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환장이 된 날강도 미제는 기필코 중국적멸망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다,” 『노동신문』, 2015.2.4.

105) “과학기술발전을 적극 추동하는 우리의 프로그램기술,” 『노동신문』, 2014.11.4.

106) “룡남산판, 조선판이 된 인터넷프로그래밍경연무대,” 『노동신문』, 2015.3.1.

107) “민족만대의 변영을 담보하는 불패의 힘,” 『노동신문』, 2015.10.18.

108) “남조선당국이 확산시키고있는 원전해킹 사건에 대한 북소행설의 진상을 밝힌다,” 『노동신문』, 2015.3.28.

109)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로켓트군 화력타격임무

모습을 사진과 함께 보도하였다.<sup>110)</sup> 2017년 9월 16일 ‘화성-12형’ 발사훈련 소식을 전하면서 자신들의 목표가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sup>111)</sup> 또 북한은 ICBM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 것을 두고 “미국과 주변국 간의 전략적 균형이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기도 하였다.<sup>112)</sup> 북한은 사이버 전력의 규모와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사진을 배제하고 보도하지만, 미사일 관련 보도 시에는 미사일 사진이나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의 참관 모습, 기지 사진 등을 여과 없이 공개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시험발사를 통해 국제사회가 존재를 이미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미사일 개발 자체만으로도 국제사회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노동신문 보도 행태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비대칭전력으로 서 사이버 역량의 보유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도, 전력의 비대칭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역량은 최대한 드러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오픈된 핵무기와 미사일과 달리, 생물·화학무기나 사이버 역량 등은 보유 사실 자체가 드러나지 않아야 상대방을 압박하기 더욱 수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북한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이버전 및

---

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를 긴급소집하시고 화력타격계획을 최종검토, 비준하시였다,” 『노동신문』, 2013.3.29.

110)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술로켓탄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노동신문』, 2014.8.15.;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위력이 힘있는 과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완전성공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시험발사를 보시였다,” 『노동신문』, 2015.5.9.;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해군부대들에 실전배비되는 신형반함선로켓발사훈련을 보시였다,” 『노동신문』, 2015.6.15.

111)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발사훈련을 또다시 지도하시였다,” 『노동신문』, 2017.9.16.

112)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는 시비거리로 될수 없다,” 『노동신문』, 2017.1.20.

사이버테러 행위의 배후로 지목받는 것에 관하여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 다만, 이는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이자, 공격의 패턴 등을 상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한 행위로 분석할 수 있다.

### 3. 유형별 비대칭전력 현황 및 분석

북한의 비대칭전력은 핵무기 및 중·장거리 미사일, 사이버 전력, 특수작전부대, 생화학무기, EMP탄 등이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비대칭전력은 일방만 가지고 있거나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전력이나 무기체제이므로 남북한 간의 비대칭전력에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만 포함되어야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이버 전력이나 특수작전부대, EMP탄<sup>113)</sup>은 한국도 보유하고 있고, 남북한 간 전력 차이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이다.<sup>114)</sup> 하지만 본 연구는 비대칭전력의 보유 여부 뿐 아니라 비대칭전력의 실제적 활용 여부와 공격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화학무기와 특수작전부대, 사이버 전력을 중심으로 북한의 비대칭전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이 가진 가장 위협적인 비대칭전력은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을 꼽을 수 있지만, 관련 내용은 다른 연구들에서 자세히 분석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 가. 화학무기<sup>115)</sup>

북한의 화학무기 관련 자료들은 극비문서로 취급되고, 국방백서와 많은 연구에 제시된 현황 등도 30년 이상 지난 현실성과 적합성에

113) 여기서 말하는 EMP탄은 핵무기에 의한 전자기펄스(EMP) 효과가 아닌 순수하게 EMP 효과만을 발휘하기 위하여 개발된 무기체계를 의미한다.

114) 박재완,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내용, 2022.12.12.

115) 본 항의 내용은 “북한 비대칭전력(화학무기)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진행한 박재완 화생방방재연구소장의 자문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부합하지 않는 자료들이 대부분이다. 거의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분석과 달리 화학무기 관련 내용은 확인되는 첩보와 생산되는 정보가 매우 적기 때문에 분석된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심각한 원인은 한국이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 심지어 생화학무기라는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등 관련 분야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피상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sup>116)</sup>

북한은 6.25 전쟁 이후 화학무기 개발에 착수하였으나, 본격적으로 화학전에 나선 것은 1980년대로 볼 수 있다.<sup>117)</sup> 김일성이 1980년 11월 조선노동당에서 독가스 및 세균무기를 생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언급<sup>118)</sup>했을 정도로 북한은 적극적으로 화학무기 개발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화학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생산비용이 저렴하면서도 대량살상력을 가진 화학무기는 저비용 고효율 무기로서 북한이 강력하게 고집하여 개발, 보유하고 있는 무기이다. 화학무기는 소형시설에서 비밀리에 개발, 실험, 생산을 할 수 있어 기술 발전이 비교적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화학무기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화학작용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호흡을 방해하는 질식작용제, 혈구의 산소 사용을 차단하는 혈액작용제, 피부 및 그 외 신체 부위에 심각한 염증을 유발하는 수포작용제, 신경 자극의 전달을 방해하는 신경작용제, 눈과 그 외 신체 부위에 영향을 주는 폭동진압작용제 등이다. 폭동진압작용제를 제외한 화학

116) 박재완 외, “북한 비대칭 군사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2020년 행정안전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20); 박재완, “민관군 통합 화생방 사후관리 수행방안 연구,” (2018년 육군교육사 군사학술연구용역보고서, 2018).

117) Andrew Scobell and John M. Stanford,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Pyongyang's Conventional Force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s* (Pennsylvani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US Army War College, 2007).

118) International Crisis Group, “North Korea's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Programs,” *Asia Report*, no. 167 (2009), pp. 5~6.

작용제들은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하는 화학무기로 분류된다.<sup>119)</sup>

<표 IV-1> 북한 보유 추정 화학무기

| 화학물질      | 유형 | 일반적 형태 | 치사량(LD) 및 유효량(ED)* |          |                             |                            |
|-----------|----|--------|--------------------|----------|-----------------------------|----------------------------|
|           |    |        | 경피 반수치사량           | 경피 반수유효량 | 흡입 반수치사농도                   | 흡입 반수유효농도                  |
| 염소(CL)    | 질식 | 가스     | -                  | -        | 13,500mg-min/m <sup>3</sup> | 1,300mg-min/m <sup>3</sup> |
| 포스겐 (CG)  | 질식 | 가스     | -                  | -        | 1,500mg-min/m <sup>3</sup>  | 250mg-min/m <sup>3</sup>   |
| 시안화물 (AC) | 혈액 | 가스     | -                  | -        | 2,860mg-min/m <sup>3</sup>  | 1,100mg-min/m <sup>3</sup> |
| 머스타드 (HD) | 수포 | 액체     | 1,400mg            | 600mg    | 1,000mg-min/m <sup>3</sup>  | 25mg-min/m <sup>3</sup>    |
| 사린(GB)    | 신경 | 액체/ 가스 | 1,700mg            | 1,000mg  | 35mg-min/m <sup>3</sup>     | 25mg-min/m <sup>3</sup>    |
| 소만(GD)    | 신경 | 액체     | 350mg              | 200mg    | 35mg-min/m <sup>3</sup>     | 25mg-min/m <sup>3</sup>    |
| VX        | 신경 | 액체     | 5mg                | 2mg      | 15mg-min/m <sup>3</sup>     | 10mg-min/m <sup>3</sup>    |

\* 치사량 및 유효량(부상 유발 용량)은 70kg의 성인 남성 기준을 기준으로 추계  
출처: U.S. Army Chemical School. *Potential Military Chemical/Biological Agents and Compo unds*.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2005). 염소 정보 및 포스겐, 시안화물, 머스타스의 반수유효농도: Sean M. Oxford et al., *Technical Reference Manual to Allied Medical Publication 7.5(AMedP-7.5) NATO Planning Guide for the Estimation of CBRN Casualties* (Alexandria, V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2016) 참조; 브루스 W 베넷 외, 『북한의 화생무기, 전자기펄스(EMP), 사이버위협: 특성과 대응 방안』(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22), p. 9 재인용

전투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기체와 액체 중 어떤 형태로 발사할지에 따라 화학작용제의 형태가 정해진다. 액체 형태는 대부분 결국 증발하게 되는데, 액체와 가스 형태로 존재하는 사린(Sarin)의 경우 휘발성이 강해 대부분 가스 형태에서 효과가 나타난다. 김정남 피살 당시 사용되었던 VX<sup>120)</sup>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흙 등 여러 표면에 흡수되어 서서히

119) 브루스 W 베넷 외, 『북한의 화생무기, 전자기펄스(EMP), 사이버위협: 특성과 대응 방안』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22), p. 8.

120) VX는 치명적인 화학무기 중 하나로, 무색, 무취의 액체이며 피부를 통해 소량이라도 흡수되면 횡격막을 마비시켜 질식을 유발한다. “Banned Nerve Agent Killed

가스를 배출하므로 적은 양이라도 장시간 노출될 시 사상자를 유발할 수 있다.<sup>121)</sup>

북한의 화학무기 생산능력은 평시 4,500톤, 전시 12,000톤 정도로 추정되며,<sup>122)</sup> 8개의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화학무기를 6개소의 저장시설에 분산하여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23)</sup> 북한의 화학무기 저장량은 약 2,500톤~5,000톤 규모로 추산된다.<sup>124)</sup> 북한군은 화학무기를 통해 전쟁 승리를 달성할 수 있고, 전쟁 초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한국군의 궤멸과 수도권 및 후방지역 기습 달성 및 혼란 조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sup>125)</sup> 화학무기는 즉각적으로 사상자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속전속결의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다. 특히, 화학무기를 야간에 운용할 경우, 기습을 달성하고 공격 효과를 극대화하기 쉽다. 또 화학무기는 상황과 표적의 성질에 따라 작용제의 종류를 선별하거나 혼합하여 운용할 수 있어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 경우, 한국군의 방어체계가 무력화되어 전투력 저하 및 국가 총력전 수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북한군은 화학탄을 전방부대에 주로 배치하여 야포와 로켓을 통한

---

Kim Jong Nam Within 20 Minutes, Malaysia Says," *NPR*, February 26, 2017, <<https://www.npr.org/sections/thetwo-way/2017/02/26/517340990/banned-nerve-agent-killed-kim-jong-nam-within-20-minutes-malaysia-says>> (Accessed December 13, 2022).

121) Lukas Oudejans, "Persistence of Chemical Warfare Agent VX on Building Material Surfac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June 24, 2019, <[https://cfpub.epa.gov/si/si\\_public\\_record\\_report.cfm?Lab=NHSRC&dirEntryId=345563](https://cfpub.epa.gov/si/si_public_record_report.cfm?Lab=NHSRC&dirEntryId=345563)> (Accessed December 13, 2022).

122) 이현경, "북한의 테러동향과 미국의 대테러 대북전략," 『북한연구학회보』, 제7권 1호 (2003), p. 77.

123) 오탉근, "뉴테러리즘 시대 북한테러리즘에 관한 공법적 검토," 『법학연구』, 제21권 (2006), p. 386.

124) 국방부, 『2018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8), p. 34.

125) 김석호, "북한의 비대칭 군사위협과 효과적인 대응방안 연구," pp. 25~27.

대량의 화학탄 사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전방 지역에서는 공격 준비 및 타격 시, 재래식 무기와 함께 야포, 방사포 등 다양한 수단으로 한국군의 C4I(Command, Control, Computer, Communication & Intelligence) 시설과 방어진지, 주보급로 등을 목표로 화학무기를 집중적으로 운용할 것이다.<sup>126)</sup> 이와 함께 북한군은 제독, 방호 장비들도 전방에 배치하고, 연대급 화학소대를 편성해 화생방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1992년 2월부터 전 주민에게 방독면을 지급하고 화생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화학작용제를 사용한 화학전 대비훈련도 시행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화학무기를 전시에 활용한다면, 스커드 미사일과 전투기에 화학탄을 싣고 한국의 공군기지 및 주요 지휘부, 서울 및 수도권 등 주요 도심지를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대량의 인명 피해를 유도하고, 주요 방어진지와 주보급로 사용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 지휘통제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할 것이다. 또 후방지역의 전쟁 지도본부와 양륙 공·항만 등의 국가·군사 중요시설과 동원·증원 전력 집결지 등에 항공기와 미사일 등으로 추가적인 화학무기 공격을 단행할 가능성도 크다.

<표 IV-2> 화학무기의 영향

| 구분                   | 영향 받는 면적, 잠재 사망자 수               |                                 |                                  |
|----------------------|----------------------------------|---------------------------------|----------------------------------|
|                      | 날씨 맑은 낮시간                        | 흐린 낮시간                          | 비람 없는 맑은 밤시간                     |
| 화학무기<br>(사린 1,000kg) | 0.74km <sup>2</sup> ,<br>11,000명 | 0.8km <sup>2</sup> ,<br>13,000명 | 7.8km <sup>2</sup> ,<br>125,000명 |

출처: U.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ssessing the Risks* (Washington D.C., 1993), pp. 53~54; 브루스 W 베넷 외, 『북한의 화생무기, 전자기펄스(EMP), 사이버위협: 특성과 대응 방안』, p. 13 재인용

126) 육군본부, 야전교범 운용-5-2 『화생방작전』 (대전: 국군인쇄창, 2014), pp. 1-9~1-10.



북한이 2톤 규모의 사린을 사용하여 서울과 같은 인구 밀집지 역을 기습공격할 경우, 약 25만 명의 사상자가 속출할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전쟁 초 대혼란과 공황을 초래해 전쟁 의지를 낮추고자 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또 미군 병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비행장을 공격의 중심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 북한은 공격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일본과 괌, 알래스카, 하와이 등에 있는 미 군사기지에 핵 또는 화학탄두 미사일을 발사하여 작전 차단을 시도할 가능성도 크다.<sup>127)</sup>

<표 IV-3> 북한 보유 화학무기 운반수단

| 구분              | 추정량(톤) | 추정량(발)           |
|-----------------|--------|------------------|
| 포탄, 로켓          | 2,400  | 포탄 및 로켓 800,000발 |
| 탄도미사일           | 150    | 탄두 500발          |
| 항공기, 드론, 특수작전부대 | 150    | 추정불가             |
| 대용량저장고          | 300    | 상기 무기의 재충전       |

출처: 브루스 W 베넷 외, 『북한의 화생무기, 전자기펄스(EMP), 사이버위협: 특성과 대응 방안』, p. 12.

북한이 화학무기를 운반하는 수단은 <표 IV-3>과 같다. 북한은 전쟁 초 2~3일간 다양한 운반수단을 활용하여 공격적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 초의 적극적인 화학무기 사용은 미국 투입을 지연 또는 최소화할 수 있고, 내부 혼란을 일으켜 전쟁 의지 자체를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속전속결 전략을 활용하고자 화학무기를 포함한 비대칭전력 증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up>127)</sup> U.S. Department of the Army, *ATP 7-100.2 North Korean Tactics* (Washington, D.C.: Army Techniques Publication, 2020), pp. 1~22.

## 나. 생물학무기<sup>128)</sup>

생물학무기는 ‘가난한 자의 핵무기’라 지칭될 정도로 적은 비용으로도 막대한 인명 살상을 초래할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제조가 쉽다는 특징이 있다. 생물학무기는 화학무기와 같이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of Convention: BWC)에 가입된 국가는 제조, 생산, 보유가 제한된다. 이런 점에서 생물학무기는 남북한 간에 비대칭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전력으로 분류된다. 국제규범에 의거 생물학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한국과 달리, 북한은 1960년대부터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생물학무기를 실험하고, 배양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 기원과 유사한 차원에서 생물학무기를 개발하였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 전력의 비대칭성을 강화하고자 생물학무기를 개발한 것이다. 실제로 생물학무기 개발은 핵무기 개발보다 수월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므로 북한으로서는 피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생물학무기의 개발 및 생산시설은 화학산업이나 제약산업 시설과 유사하여 쉽게 눈에 띄지 않고, 생산단가도 핵무기의 0.01% 수준이라 경제적 환산 가치가 매우 높다.<sup>129)</sup> 이뿐 아니라 군사적 측면에서도 핵무기와 비교해 전술적으로 사용 가치가 높아 핵무기 보유 혹은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때 대체재로 활용하기 좋다. 사용할 무기의 종류와 활용 방법만 결정하면, 생물학무기는 전쟁지도부나 통신시설 등 다양한 전장 표적물에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8) 본 항의 내용은 “북한 비대칭전력(화학무기)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진행한 박재완 화생방방재연구소장의 자문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박재완,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내용, 2022.12.12.)

129) 동일한 살상력을 지닌 무기를 개발한다고 가정할 때, 핵무기 프로그램은 20~100억 달러, 화학무기 프로그램은 수천만 달러가 소요되는 반면, 생물학무기 프로그램은 수백만 달러로 가능하다. “생물무기, 이보다 더 효과적인 무기는 없어,” *BreakNews*, 2003.11.27., <[https://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491](https://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491)> (검색일: 2022.12.10.).

구소련의 정의에 따르면 생물무기는 전략적 무기, 작전 무기, 전술 무기로 구분된다. 전략적 무기는 원거리 국가를 겨냥한 무기로 천연두, 탄저, 페스트 등 치사율이 높은 종류를 포함하고, 작전 무기는 전선에서 떨어진 중간거리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야토, 마비저(Glanders) 세균 등 무능화 작용제로 구성된다. 구소련은 전선에서 사용하는 전술 무기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추세로 판단하면 독소는 충분히 전선에서 활용 가능한 무기가 될 수 있다.<sup>130)</sup> 생물무기의 운용 가능성은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목적뿐 아니라 전장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며, 주도면밀한 정보수집 체계에 의해 위협을 재평가하고 새롭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학무기는 탄저균(*Bacillus anthracis*), 천연두, 콜레라(*Vibrio cholerae*), 페스트(plague), 세균성 이질,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장티푸스(*Salmonella Typhi*), 발진티푸스(*Rickettsia prowazekii*), 황열 바이러스(*Rickettsia prowazekii*), 유행성출혈열, 보툴리눔 독소(*Clostridium botulinum*), 황우(yellow rain) 등 13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사시 10일 이내에 배양하여 사용할 수 있다.<sup>131)</sup>

<표 IV-4> 북한 보유 생물학작용제 13종

| 구 분 | 미생물                                      |                     | 독소       |
|-----|------------------------------------------|---------------------|----------|
|     | 세 균                                      | 바이러스                |          |
| 13종 | 탄저균, 야토, 브루셀라,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페스트, 발진티푸스 | 천연두(두창), 유행성출혈열, 황열 | 보툴리눔, 황우 |

출처: 박재완, “생물학전 및 생물테러 대응태세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 『합동화생방기술정보』, 2005-4호 (2005), p. 38.

130)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회장 99-3-8 『생물학전방어』 (대전: 육군교육사령부, 2000), pp. 1~8.

131) 육군본부, 야전교범 참고-5-21 『핵 및 화생방 방호』 (대전: 국군인쇄창, 2015), pp. 1~24.

북한은 정주, 문천 지역 등 총 17개소에서 생물무기 연구 및 배양·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콜레라, 보툴리눔 등 5종은 무기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 <표 IV-5>는 북한 무기화 예상 작용제 5종의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북한은 생물학작용제를 특수전 부대와 고정간첩에 의한 살포와 야포, 방사포, 미사일 등을 이용하여 투발하거나, AN-2기와 배낭식 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북한 무기화 예상 작용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지만, 예상치 못한 신종 생물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그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표 IV-5> 북한 무기화 예상 작용제 5종의 특징

| 구 분 |      | 전염 경로                | 잠 복 기  | 증 상                     | 치 사 율         |
|-----|------|----------------------|--------|-------------------------|---------------|
| 미생물 | 탄저   | 호흡기, 상처              | 1~6일*  | 폐렴, 패혈증                 | 90% 이상        |
|     | 천연두  | 호흡기                  | 7~9일** | 고열, 피부물집, 점막출혈          | 20~40%        |
|     | 페스트  | 호흡기, 쥐벼룩             | 2~4일   | 발열, 오한, 각혈              | 90~100%       |
|     | 콜레라  | 호흡기, 음료수             | 1~5일   | 설사, 탈수, 혈압강하            | 50%<br>(미치료시) |
| 독 소 | 보툴리눔 | 피부, 흡입, 오염<br>음식물 섭취 | 1~4일   | 갈증, 현기증, 두통,<br>동공확대*** | 65%           |

\* 탄저균 잠복기는 최대 60일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 천연두의 잠복기는 7~9일, 대부분 12~15일로 추정하지만, 기타 문헌에서는 6~12일로 추정하기도 한다.

\*\*\* 화학작용제에 오염되면 동공이 축소되는 반면, 보툴리눔 독소에 의해 중독되면 동공이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출처: 박재완, “생물학전 및 생물테러 대응태세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 p. 39.

생물무기는 에어로졸을 형성한 흡입감염과 음식물 또는 상수도 오염, 모기와 벼룩 등 감염된 매개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살포 및 유포한다. 북한은 에어로졸 형성으로 흡입감염을 주로 운용할 것으로 보이나,

다른 경로로 운용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는 없다. 다만, 음식물과 상수도 오염은 군사적인 우위를 확보할 정도로 대량으로 오염시키는 행위는 제한될 가능성이 크고, 감염된 매개체를 이용하는 방법은 전면전 시 예기치 않게 아군이나 전장 인근 민간인을 감염시킬 우려가 커 사용이 제한적일 것이다. 전면전에서 생물무기는 다양한 투발 수단을 활용하여 전후방을 혼란에 빠뜨리고자 은밀하게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북한은 세균 8종, 바이러스 3종, 독소 2종 등 총 13종의 생물학작용제를 보유하고 있고, 치사율과 전염성, 생존성 등을 고려하여 탄저, 천연두, 페스트, 콜레라, 보툴리눔 등 5종을 무기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살포 기구, 테러 및 암살용 기구, 항공기와 헬기, 야포, 방사포, 미사일 등 다양하고 은밀한 투발 수단도 보유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에볼라, 메르스, 사스 등 국제적 위협을 초래한 병원체에 관한 연구와 무기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향후 북한이 신종 감염병 및 변종 생물무기<sup>132)</sup>를 활용한 생물무기 위협을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생물무기는 공격 목표와 양상이 화학무기와 다를 것이다. 생물무기는 미생물의 전염력과 독성 등을 활용하여 적군을 살상하고, 방어력과 전쟁 지속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전방 지역에는 독소를, 후방 지역에는 잠복기를 고려하여 미생물 위주로 운용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생물무기는 전염과 잠복기라는 특성이 있어 심리적 공포와 사회적 혼란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북한이 전면전을 각오한다면, 생물무기의 잠복기와 확산 등의 특징을 이용해 대량 피해를 유발함으로써 전쟁 지속능력을 말살하기 위해 생물무기를 운용하게 될 것이다.<sup>133)</sup>

132) 변종 생물무기는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백신이나 치료제, 항생제의 효과를 저하하는 새로운 감염병 병원체를 활용하여 감염력과 치사율을 높이기 위한 생물무기를 의미한다.

## 다. 특수작전부대

북한은 1948년 1월 1일 강동군 승호면에 특수요원 양성을 위해 설립한 ‘강동정치학원’을 모체로 특수작전부대를 양성·운영하고 있다. 강동정치학원이 1950년 폐쇄되기 1년 전인 1949년 766보병연대(제3군관학교)를 창설하여 비정규전 부대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약 200여 명에 불과했던 특수작전부대를 보병대대, 포병대대, 통신대대, 표무원대대, 강태무대대 등으로 확대 구성하여 3,000여 명에 달하는 특수작전부대를 구축한 것이다.<sup>134)</sup> 이후 1995년에는 해상저격여단 2개, 공군 공군저격여단 2개를 창설하고, 2000년대 중반에는 경보병사단을 창설, 경보병대대를 경보병연대로 증편하였다. 최종적으로 북한의 특수작전부대는 2000년대에 7개 사단이 창설되고, 11개 연대가 증편되어 전방에 배치되었다.<sup>135)</sup>

북한이 특수작전부대를 창설한 목적은 목표물의 습격·파괴, 후방 교란, 테러, 통신·미사일 기지·비행장 등 주요 전략·전술 거점의 무력화 등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걸프전과 이라크전을 지켜보며 얻은 교훈을 토대로 특수전 병력을 기존 10만에서 20만으로 확충하고, 유사시 전후방에 특수부대를 동시 투입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였다.<sup>136)</sup> 북한의 20여만 명 규모의 특수작전부대는 11군단, 전방군단의 경보병 사단과 여단, 저격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 연대 등으로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다. 해당 특수작전 부대들은 전시에 땅굴, 잠수함, 공기 부양정, AN-2기, 헬기 등을 사용하여 적진에 침투한 후 주요 부대와 시설 타격, 요인암살, 교란 등 작전을 수행한다.<sup>137)</sup>

133) 육군본부, 야전교범 참고-5-21 『핵 및 화생방 방호』, pp. 1~24.

134) 박용환, “북한군 특수전부대 위협 평가,” 『국방연구』, 제58권 2호 (2015), pp. 115~117.

135) 정보사령부, 『특수전부대』 (대전: 국군인쇄창, 2010), p. 11.

136)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북한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15), pp. 132~133.

북한의 특수작전부대 활용 계획은金正은의 ‘7일 전쟁’ 작전계획으로 요약할 수 있다.金正은의 ‘7일 전쟁’ 작전계획에 따르면, 북한은 비대칭전력을 활용해 미군의 본격적인 개입을 막아 7일 이내에 대한민국 전역을 점령하여 초반 기선제압을 하고, 이후 재래식전력을 통해 전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sup>138)</sup> 다양한 비대칭전력이 활용되겠지만, 특히 북한의 특수작전부대는 전쟁 발발과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한국군 지역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크다. 아래 <표 IV-6>과 같은 대규모의 특수작전부대들이 대한민국 국가 주요시설 및 군사 주요시설을 타격하고, 군사작전 지역 확보, 지휘소 파괴 등의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표 IV-6> 북한군 특수작전부대 지역별 투입 규모

| 구분 | 사단지역     | 군단지역                                        | 야전군지역                                                   | 야전군 후방지역                                                   |
|----|----------|---------------------------------------------|---------------------------------------------------------|------------------------------------------------------------|
| 인원 | 1,400여명  | 29,000여명                                    | 115,000여명                                               | 61,000여명                                                   |
| 부대 | 경보병연대(1) | 경보병연대(4)<br>경보병사단(2)<br>경보병여단(1)<br>저격여단(1) | 경보병연대(11)<br>경보병사단(7)<br>경보병여단(5)<br>저격여단(3)<br>정찰대대(7) | 경보병여단(4)<br>저격여단(3)<br>항공육전여단(3)<br>해상저격여단(2)<br>공군저격여단(2) |

출처: 박용환, “북한군 특수전부대 위협 평가,” p. 129.

타격 목표별로 특수작전부대 투입 규모를 구분하면 <표 IV-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37) 국방부, 『2020 국방백서』, p. 25.

138) “북한 새 ‘7일 작전계획’…‘미 증원군 도착 전 남한 점령,’” VO4, 2015.1.8., <<https://www.voakorea.com/a/2590216.html>> (검색일: 2022.12.10.).

<표 IV-7> 북한군 특수작전부대 타격 목표별 투입 규모

| 목표 | 화력진지  | 군수시설  | 지휘소   | 통신시설  | 탄약소   | 교량, 터널 | 유도탄 기지 |
|----|-------|-------|-------|-------|-------|--------|--------|
| 규모 | 분대~중대 | 분대~소대 | 분대~중대 | 소대    | 소대    | 소대     | 중대     |
| 목표 | 방송시설  | 교도소   | 정부기관  | 발전소   | 산업시설  | 항만시설   | 비행장    |
| 규모 | 소대    | 소대    | 소대    | 소대~중대 | 소대~대대 | 중대     | 대대     |

출처: 정보사령부, 『특수작전부대』, p. 153.

북한의 특수작전부대가 실제 침투에 활용된 사례는 다수 발견된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민족보위성 경찰국 소속의 124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한 1.21사태와 1968년 10월 30일~11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발생한 울진·삼척무장공비침투사건, 1996년 9월 18일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경찰국 소속 상어급 잠수함이 침투한 강릉무장공비침투사건 등이 있다. <표 IV-8>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특수작전부대의 침투 사례는 급격히 줄어든 모습이다. 1995년 이후 북한의 특수작전부대가 추가 창설 및 증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침투가 줄어든 점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하지만 이후 북한이 청와대 등의 아군 전략시설 모형을 구축해 타격 훈련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된 점을 고려해보면, 침투 전략의 폐기라기보다는 전략 수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IV-8> 연도별, 유형별 침투 현황

(2020년 11월 30일 기준)

| 구분               | 계     | 1950<br>년대 | 1960<br>년대 | 1970<br>년대 | 1980<br>년대 | 1990<br>년대 | 2000<br>년대 | 2010<br>년대 | 2020<br>년 |
|------------------|-------|------------|------------|------------|------------|------------|------------|------------|-----------|
| 직접침투             | 1,749 | 375        | 998        | 298        | 38         | 50         | -          | 27         | -         |
| 간접침투             | 214   | -          | -          | -          | 127        | 44         | 16         | -          | -         |
| 월북,<br>남북자<br>남파 | 39    | 4          | 21         | 12         | 2          | -          | -          | -          | -         |
| 계                | 2,002 | 379        | 1009       | 310        | 167        | 94         | 16         | 27         | -         |

출처: 국방부, 『2020 국방백서』, p. 320.

## 라. 사이버공격 역량

북한의 사이버공격 역량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새로운 안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은 사이버공격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2009년 디도스(DDos) 공격 사건 이후 랜섬웨어 공격과 국제금융기관,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공격 패턴을 다각화하고 있다.<sup>139)</sup>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서버 마비와 같은 단순한 패턴을 벗어나 정보 탈취를 넘어 외화벌이로까지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북한이 사이버공격의 범위를 금융 자산과 암호화폐 공격으로 넓힌 것은 북한의 통치자금 및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창구 다각화로 볼 수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심각성을 반증하듯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응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개최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의 주요 대상인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의 보안과 사이버 범죄 관련 자금세탁 대응, 사이버 정책에

139) 이승열, 『북한 사이버 공격의 현황과 쟁점』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22), p. 1.

대한 국가 간 공조 강화에 합의하였다.<sup>140)</sup> 또 지난 8월 9일에는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되고, 이어 11월 17일에는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엄”이 개최되기도 하였다.<sup>141)</sup> 잇따른 한·미 당국의 공동 대응 노력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문제의 심각성과 북한의 사이버공격 역량에 대한 대응 모색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사이버공격 역량이 국제사회의 안보 위협을 고조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북한의 사이버공격 역량이나 지휘·통제체계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어 대응 방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북한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권력이 이양된 이후 사이버공격 역량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2010년 현대전이 탄약전에서 정보전으로 바뀌고 있다며, 정보전 부대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142)</sup> 이후 북한 권력의 새로운 중심이 된 김정은은 사이버공격 역량을 핵·미사일과 함께 인민군의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보검’으로 칭하며 핵·미사일과 사이버공격 역량을 핵심적인 비대칭전력으로 천명하며 더욱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sup>143)</sup>

140) 제20대 대통령실,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5.2 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1846>> (검색일: 2022.11.30.).

141) 외교부,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움 개최,” 2022.11.17.,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025](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025)> (검색일: 2022.11.30.).

142) “김정일 ‘정보전부대는 나의 배짱이고 예비대’,” 『연합뉴스』, 2011.6.28., <<https://www.yna.co.kr/view/AKR20110628128400043>> (검색일: 2022.11.30.).

143) “김정은 ‘사이버戰은 만능의 寶劍’… 黨산하에 7개 해킹조직 1700명,” 『조선일보』, 2013.11.5.,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05/2013110500285.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05/2013110500285.html)> (검색일: 2022.11.30.).

현재 북한이 사이버전을 담당할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북한의 사이버전 담당 부대 시초는 1986년 군 지휘자동화대학<sup>144)</sup>을 설립하여 100여 명의 컴퓨터 전문 요원을 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1991년 걸프전이 연합군 승리로 끝나자 전자전의 중요성을 인식한 북한이 총참모부 직속으로 지휘자동화국과 각 군단에 전자전 연구소를 신설하면서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5년 중앙당 35호실에 기초자료조사실을 설치해 타국가기관이나 단체, 개인에 관한 기밀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수집하였고, 1998년에는 사이버 부대(121소) 창설, 1999년에는 사이버심리전 부대인 적공국 204소 설립, 2004년 중반부터는 중국 단둥을 거점으로 사이버 부대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에는 인민무력부 경찰국, 노동당 작전부, 중앙당 35호실 등을 통합하여 경찰총국을 창설하는 한편, 사이버 부대를 사이버 지도국(121국)으로 개편하고 병력도 증강하였다. 이어 2012년에는 전략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여 병력을 6,000여 명 규모까지 확대한 것으로 파악된다.<sup>145)</sup> 현재 북한의 사이버전 조직 체계는 아래 <그림 IV-2>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44) 평양시 미림동에 위치한 대학으로 '미림대학'으로 불렸으며, 2000년 '김일 군사대학'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145) 김진광, "북한의 사이버조직 관련 정보 연구: 조직 현황 및 주요 공격사례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제28권 2호 (2020), p. 113.

<그림 IV-2> 북한 사이버전 조직 체계



출처: 김진광, “북한의 사이버조직 관련 정보 연구: 조직 현황 및 주요 공격사례 중심으로,” p. 113.

종합하면,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하나의 군 조직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무력 단체와 정보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김정은과 조선노동당의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146)</sup>

북한 소행으로 의심되는 대부분의 사이버공격은 정찰총국 산하의 121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라자루스(Lazarus), 블루노로프(BlueNorOff), 안다리엘(Andarial) 등의 북한 주요 해킹그룹들도 정찰총국 소속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북한이 아닌 중국, 러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벨라루스 등 다양한 국가에서 사이버공격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찰총국 외에도 총참모부 산하 전자전사령부와 하위의 여러 전자정보전 집단, 그리고 통일전선부와 국가보위성도

<sup>146)</sup> 편제상 정찰총국은 총참모부 산하지만, 총참모장이 아닌 김정은의 직접 지휘 아래 있는 독립부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일기·김호흥,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 기구』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p. 61.

사이버공격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참여 집단이 증가하는 현상은 북한이 사이버공격 역량을 북한 이탈 주민과 학자, 정부, 언론, 금융기관, 제약회사 등 다양한 목표에 대해 방첩과 공작, 외화확보, 기술 및 정보 탈취 등을 시도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147)</sup>

실제로 북한은 라자루스,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김수키(Kimsuky), 탈륨(Thallium) 등의 해킹조직을 활용해 다양한 사이버공격을 단행하고 있다. 2007년 초 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라자루스는 해외 정부와 금융기관, 방송국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주로 하였는데, 최근 들어 가상화폐 관련 사이트를 대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라자루스 하위기관으로 추정되는 블루노로프와 안다리엘은 해외 금융기관, 특히 가상 자산과 암호화폐거래소를 대상으로 불법적 수입을 올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부터 활동이 파악된 김수키는 국제적 정보수집을 위해 지능형 지속 공격(Advanced Persistent Threat, APT)을 주로 활용하며, 멀웨어(Malware) 및 악성코드 첨부 문서를 유포해 정보수집을 한다. 이외에도 ATP 38, 평화의 수호자(Guardians of Peace), 히든 코브라(Hidden Cobra), 비글보이즈 등도 북한의 해킹조직으로 의심받는 상황이다.<sup>148)</sup>

북한이 최근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암호화폐 탈취 공격이다. 위의 해킹조직이 중심이 된 북한의 암호화폐 공격은 대체로 유인 및 해킹 → 자금세탁 → 통화교환의 순서로 진행된다. 즉, 가장 먼저 피싱 공격을 통해 해외의 암호화폐 지갑에 침입하거나 암호화폐거래소를

147) 오일석,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내용, 2022.12.12.; 김보미·오일석,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주요국 대응,” 『INSS 전략보고』, 147호 (2021), p. 4.

148) 김보미,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내용, 2022.12.12.

직접 공격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탈취한 암호화폐를 쪼개 출처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믹싱(mixing) 기술을 활용하여 암호화폐의 이동 추적을 어렵게 만들어 자금세탁을 한다. 마지막으로 자금세탁이 끝난 암호화폐를 아시아 기반 거래소로 이동시켜 중국 위안화와 같은 법정 통화로 교환하여 현금 확보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sup>149)</sup>

북한은 전통적으로 무기 수출과 마약 제조 및 판매, 위조지폐 밀매 등을 활용하여 외화를 확보하였으나, 2010년 이후로는 가상화폐 등에 대한 금융 공격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암호화폐는 거래내용이 암호화되어 실소유주를 확인하기 어렵고, 공격 출처도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선택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무력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공격 역량에 대한 평가는 국가별, 기관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북한의 사이버공격 역량을 중국이나 러시아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2009년 이후 크게 성장하였고 금융 분야에서의 해킹 능력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sup>150)</sup> 하지만 영국 IISS(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는 북한을 사이버 정보 능력이 없고 세계 최하위 수준의 보안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였다.<sup>151)</sup> 또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는 북한의 금융 부문에서의 사이버공격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사이버 방어력

---

149) 위의 자료.

150) 조상진, “북한 해킹조직, 외화탈취 위한 신종 랜섬웨어 4종 유포…금융 해킹 집중,” *VOA*, 2022.5.5., <<https://www.voakorea.com/a/6557282.html>> (검색일: 2022.11.15.).

151)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Cyber Capabilities and National Power: A Net Assessment,” June 28, 2021, <<https://www.iiss.org/research-paper/2021/06/cyber-power---tier-three/>> (Accessed 1 December, 2022), pp. 125~132.

과 공격력, 인터넷 정보 통제력, 해외정보 수집력, 상업적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세계 14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sup>15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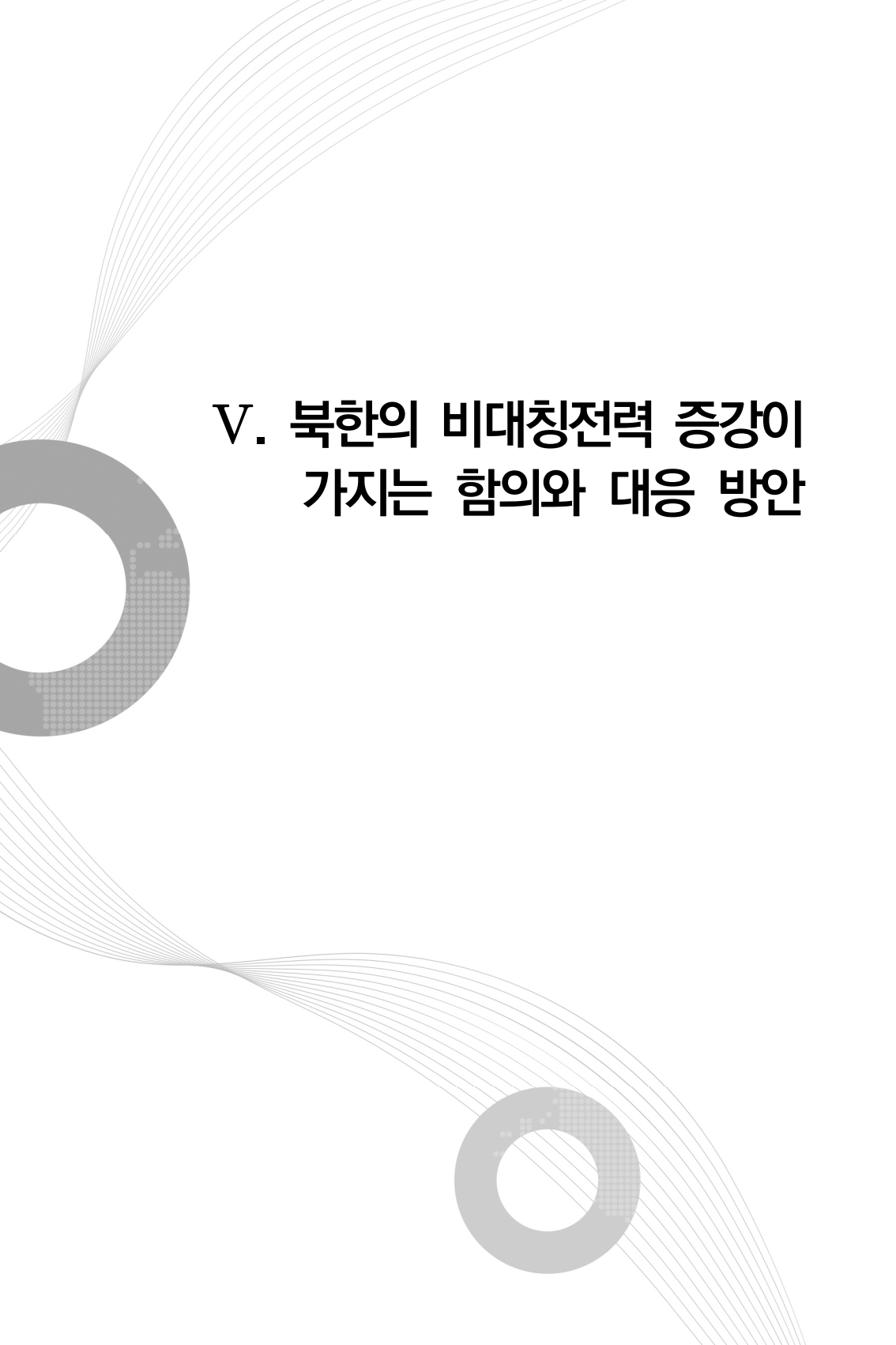
북한의 사이버공격 역량에 대해 평가가 갈리고 있지만, 대체로 금융 분야에서의 북한의 사이버공격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북한의 사이버공격 역량은 김정은 시대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안보 환경에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북제재의 강도는 더욱 세지고 기간 또한 길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비대칭전력은 진입 비용이 낮고, 공격 성공 시 수익률이 높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사이버공격 역량 증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핵심 비대칭 전략으로서 사이버공격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무력화하고 체제 유지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152) 벨퍼센터가 발표한 사이버 역량 종합순위에 따르면 미국이 1위, 한국이 7위로 분석되었다. Julia Voo, Irfan Hemani and Daniel Cassidy, "National Cyber Power Index 2022,"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September 2022, <<https://www.belfercenter.org/publication/national-cyber-power-index-2022>> (Accessed 3 December, 2022.).





The background features a series of thin, curved lines that sweep across the page. Two large, light gray circles are positioned on the left side, one near the top and one near the bottom. The right half of each circle is filled with a fine grid of small dots.

## V.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함의와 대응 방안



## 1.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함의

북한은 핵·미사일과 함께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특수작전부대, 사이버공격 역량 등의 비대칭전력 증강에 국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사이버 전력은 핵·미사일과 함께 북한의 3대 전쟁수단으로 규정될 만큼 북한 내에서도 그 중요도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물론, 북한의 사이버공격 역량을 포함한 비대칭전력 수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1991년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착수할 당시 북한의 핵 능력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현재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과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을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의 실전 배치를 지속해서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이 대응 방안 모색이 쉽지 않은 다양한 유형의 비대칭전력 증강을 도모하는 것은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 그리고 국제사회의 안보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앞서 IV장에서 북한의 비대칭전력 강화 배경 및 현황을 살펴본 결과, 북한은 비대칭전력 증강이라는 전략을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에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해 한정된 국가 예산을 사회통제 및 군사력 강화, 더 나아가 추가적인 통치자금 확보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지속되는 경제난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하에서 생존 전략을 수립해야 했던 북한으로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즉, 북한이 진입 장벽이 낮고, 적은 비용으로 큰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비대칭전력 증강에 몰두한 것은 국가생존 전략이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북한의 비대칭전력 강화 기조는 김정은 시대 들어 더욱 심화하는 모습이다. 김정은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 수위를 높여왔다. 김정은은 2013년 3월 29일 오전 0시 30분 전략미사

일 부대의 긴급 작전회의를 소집하고 미사일 사격대기를 지시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그리고 다음 날인 30일에는 “이 시각 이후 남북관계는 전시상황에 들어간다”라고 선언하며,<sup>153)</sup> 대남전략의 기조를 ‘단절’과 ‘대결’로 전환할 것을 천명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를 새로운 위협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북한의 대남 도발 및 위협의 수위가 높아질 것을 예상하기는 충분하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연달아 개최되면서 일시적으로나마 남북관계에 근본적 변화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하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no-deal)로 끝나면서 남북관계는 빠르게 얼어붙었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수위는 점차 높아졌다.

잠시 변화를 기대했지만, 북한은 대결과 단절을 핵심으로 하는 대남 전략을 한치도 수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에는 대남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외에도 한국과 국제사회의 안보 위협을 고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물론, 노동신문이나 여타 문헌 자료를 통해 파악한 비대칭전력 현황은 북한이 사이버공격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도로 아주 단편적인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비대칭전력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전력의 비대칭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역량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선택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무기 및 화학무기 전력은 최대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유엔 생물무기금지협약과 화학무기금지조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CWC)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유사시 공격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153)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3.30.

즉, 북한은 유사시 핵·미사일 외에도 생화학무기를 실전에 투입해 전선이 형성되기 전 승기를 잡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생화학무기 보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생화학무기 개발도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여러 정보를 종합해보면, 북한이 신경성, 혈액성, 최루성, 수포성 화학무기와 10~13종의 생물무기를 개발하여 분산된 시설에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완전히 허구는 아닐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사이버공격 역량은 북한이 인민의 만능보검이라고 칭할 정도로 중요한 핵심 비대칭전력이다. 사이버공격 역량은 평시와 전시를 가리지 않고 전전후로 활용될 수 있어 더욱 파괴력이 크다. 평시에는 한국 사회 내에 혼란을 조성하는 등 상시적 공격을 시도할 수 있고, 전시에는 전자전으로 대표되는 현대전의 작전을 무력화하거나 한미 간의 군사적 공조를 크게 흔들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평시에 한국의 정부 기관과 금융기관, 군부대, 전문가, 관료 등 다양하고 폭넓은 대상에 대해 해킹을 시도하고 정보 수진을 교란하고 있다. 사이버공격의 양상도 단순한 디도스 공격에서 금융기관과 언론사, 국가기간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테러, 온라인상에서의 대남 심리전 전개 등으로 다각화하고 있다. 또 북한은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외 여러 나라의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탈취하고, 암호화폐를 활용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국가 통치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최근 주요 국가들이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강화하고 있고, 대량의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는 거래소가 적어 현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이 사이버 전력을 활용해 직접적인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탄탄한 국제공조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디 비대칭전력은 란체스터 법칙이 통하지 않는 조커(Joker) 카드

와 같으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높일수록 그 효과가 커진다. 따라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비대칭전력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북한의 비대칭전력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북한 간 군사 전력의 비대칭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칭전력의 격차는 유사시 한국의 승리를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더 늦기 전에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의 비대칭전력 보유 사실은 부정하기 힘든 단계에 이르렀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있어 북한과 같이 비대칭전력을 개발·보유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이 다양한 유형의 비대칭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비대칭전력으로 맞서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북한의 비대칭전력 보유 현황을 세밀히 추적·분석하고, 비대칭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2. 북한 비대칭전력 증강에 따른 대응 방안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현실화하여 한국과 국제사회의 안보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지만, 이를 무력화할 방안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 한국이 국제적 규범을 무시하고 북한과 비대칭전력 증강 대결을 할 수도 없고, 북한이 비대칭전력 증강 전략을 포기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우리는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 전략에 관한 대응 방안 모색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에 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유사시 우리 국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비대칭전력에 관한 대응 방안 마련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 고려사항을 먼저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비대칭전력 보유를 인식하고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춰 국가안보 위협의 개념 및 핵심 위협 요소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과거 남북한의 군사 전력 비교는 재래식 무기와 병력 등 전통적 군사 전력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고, 생화학무기와 특수전부대, 사이버공격 역량을 확보해 전력의 비대칭성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 군사 전력 평가는 무의미할 수 있다. 남북한 간의 비대칭전력 차이는 유사시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남북한 간의 전력 비대칭성을 높이는 위협 요소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비대칭전력의 위협을 낮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에 관한 국가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 시,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은 범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는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은 부처의 업무 영역과 특수성에 따라 서로 다른 목표와 지향점을 지녔을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의 경우, 유사시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외교부는 대북제재 무력화 문제 및 미국과의 협력 체계 구축 문제에 더한 관심을 둘 수 있다. 또 통일부는 남북한 간에 대립과 갈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하는 상황 관리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각 부처가 같은 사안에도 각기 다른 목표와 접근법을 가질 수 있어 부처 간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대원칙을 설정하고, 각 부처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할 컨트롤타워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의 비대칭전력 대응은 단일 국가 단위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적 공조를 이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은 다중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위협을 더 증첩하고, 파괴력을 배가

하는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보다 미국과 일본, EU 등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가장 먼저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유사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님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 공조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책적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정부는 전통적인 전쟁 개념에 기반한 각 군의 역할과 군사력 증강 방향이 현시점에서도 타당한지 포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 위주의 전력 구성에서 벗어나 비대칭전력 중심의 군사 전력 확충에 나선 지 이미 오래다. 북한군의 도발 행태는 물론 무기체제도 달라진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전통적 국가안보 개념에 매몰된 채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효과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적 군사 전력과 비대칭전력의 규모와 파급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관련 분야 연구 및 정보수집을 확대하고,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관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때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제 대응 능력을 갖출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면, 남북한 간의 전력 비대칭성을 낮추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북한 비대칭전력 대응 TF’를 구성해야 한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무총리 직속의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북한 비대칭전력 대응 TF’는 신흥안보위원회와는 다른 조직이지만, 그 안에서 다뤄야 하는 내용에는 다수 유사점이 있어 향후 연계하



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 비대칭전력 TF’가 구성되면, 국가안보실이 북한 비대칭전력 대응에 관한 대원칙 및 대전략을 설정하고,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국방부는 북한의 비대칭전력 보유 현황 파악에 관한 연구 및 정보수집을 시행하고, 유사시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 전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면, 외교부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한 대응체계 마련과 핵·미사일 포함 비대칭전력의 확장 억지 노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부는 남북한 간의 대화를 통해 북한이 국제규범에 반하는 비대칭전력 증강 노력을 멈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비대칭전력은 유사시 그 파급력과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확장 억지를 위한 노력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뿐 아니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체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북한 비대칭전력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체는 앞서 제시한 ‘북한 비대칭전력 TF’와 연계하여 운영한다면 그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비대칭전력 중 사이버공격 역량은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다양한 피해를 유발하고, 피해 대상도 국가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과 개인으로 폭넓다. 따라서 사이버전의 방어 능력을 향상하고, 보안망을 구축하여 민·관의 피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비해 방공능력 및 요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 무인기의 경우, 단순 정찰로 끝나지 않고 생화학무기 등을 탑재할 경우,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무인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망 구축을 서두를 필요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민간기업과 민간 전문가의 활발한 참여

를 유도한다면, 기술개발의 속도 및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북한의 비대칭전력의 파괴력을 낮추고, 확장을 억지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비대칭전력 문제는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비대칭전력의 유형에 따라 공격 대상이 되는 국가와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북한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대칭전력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김정남 피살 사건에 화학무기를 활용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화학무기는 전 세계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현재도 여러 국가의 금융기관과 암호화폐거래소 등을 공격하여 경제적 손해를 유발하고 있다. 또 불법적으로 탈취한 외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국가 통치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되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 핵심 국가 간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UN을 중심으로 북한의 비대칭전력 억지를 위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때 각 국가의 안보 조치가 지역 평화를 저해하거나 지나치게 자국 중심으로 설정되지 않도록 상호 간 노력해야 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3 국제정세 전망』.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2.
- 국방부. 『2014 국방백서』.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2014.
- \_\_\_\_\_. 『2018 국방백서』.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2018.
- \_\_\_\_\_. 『2020 국방백서』.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2020.
- 김일기·김호흥.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 김홍규 외.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 연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 문광진·김재홍. 『대테러 정책 발전방안: IED 관련 대비 과제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9.
- 문성민. 『북한 재정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 서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4.
- 박창희. 『군사전략론』.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4.
- 브루스 W 베넷 외. 『북한의 화생무기, 전자기펄스(EMP), 사이버위협: 특성과 대응 방안』.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22.
- 산업연구원. 『2022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세종: 산업연구원, 2022.
- 신종협·최형선·최원.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서울: 보험연구원, 2010.
-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회장 99-3-8 『생물학전방어』. 대전: 육군교육사령부, 2000.
- 육군본부. 야전교범 운용-5-2 『화생방작전』. 대전: 국군인쇄창, 2014.
- \_\_\_\_\_. 야전교범 참고-5-21 『핵 및 화생방 방호』. 대전: 국군인쇄창, 2015.
- 이승열. 『북한 사이버 공격의 현황과 쟁점』.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22.
- 이승현. 『북한 핵무력 법제화의 함의와 대응 방향』.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22.

- 정보사령부. 『특수전부대』. 대전: 국군인쇄창, 2010.
- 조선인민군. 『학습제강』(군관, 장령용).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6.
-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3.
- 최우선.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전략』.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2.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북한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12.
- \_\_\_\_\_. 『2016 북한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15.
- \_\_\_\_\_. 『2017 북한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16.
- 특수작전사령부. 『미 육군교리 3-05 특수작전 번역집』. 이천: 특수작전사령부, 2019.
- 하영선 편. 『위기와 복합: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1.
-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1998.
- 홍민.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활동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Casti, John. *X-Events: The Collapse of Everything*. New York: William Morrow, 2012.
- Cohen, William S. and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Report of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Washington D.C.: DIANE Publishing, 1997.
- Dougherty, James E., and Robert L. Pfaltzgraff Jr.,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 Comparative Survey*. Cambridge: Harper & Row, 1981.
- Johnson, Stuart, Martin Libicki and Gregory Trevenrton ed., *New Challenges, New Tools for Defense Decisionmaking*. Santa Monica, Ca: RAND, 2003.
- Kern, Charles L.. *North Korea's Asymmetric Warfare Strategy: The Critical Role of Nuclear Weapons in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Saint Louis, Missouri: Webster University, 2018.
- Mckenzie, Jr., Kenneth. *The Revenge of the Melians: Asymmetric Threats and the Next QDR*.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2000.

- Metz, Steven and Douglas Johnson II, *Asymmetry and U.S. Military Strategy: Definition, Background and Strategic Concepts*. Carlisle Barracks, P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U.S. Army War College, 2001.
- Oxford, Sean M., et al. *Technical Reference Manual to Allied Medical Publication 7.5(AMedP-7.5) NATO Planning Guide for the Estimation of CBRN Casualties*. Alexandria, V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2016.
- Scobell, Andrew and John M. Stanford.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Pyongyang's Conventional Force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s*. Pennsylvania: Carlisl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U.S. Army War College, 2007.
- U.S. Army Chemical School. *Potential Military Chemical/Biological Agents and Compounds*.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2005.
- U.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ssessing the Risks*. Washington, D.C., 1993.
- U.S. Department of the Army. *ATP 7-100.2 North Korean Tactics*. Washington, D.C.: Army Techniques Publication, 2020.

## 2. 논문

- 권양주.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관한 소고.” 『KIDA 주간국방논단』. 제1469호, 2013.
- 권혁천·이용준·박원형. “한국의 사이버공격 비교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융합보안논문지』. 제20권 5호, 2020.
- 김광현.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육군의 특수작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군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 김기호.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의 군사전략 변화.” 『합동군사연구』. 24호, 2014.

- 김병조. “‘사회안보’ 이론의 한국적 적용: 도입, 채택, 발전.” 『국방연구』. 제54권 1호, 2011.
- 김보미·오일석.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주요국 대응.” 『INSS 전략보고』. 147호, 2021.
- 김석호. “북한의 비대칭 군사위협과 효과적인 대응방안 연구.”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영호.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군의 역할.” 『평화연구』. 제17권 2호, 2009.
- 김영호·김수홍·박태용. “EMP의 개념 및 대응 방안.” 『한국정보통신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자료집』. 2015.
- 김진광. “북한의 사이버조직 관련 정보 연구: 조직 현황 및 주요 공격사례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2차 하계학술대회는 논문집』. 제28권 2호, 2020.
- 김홍광. “특별기고: 북한의 정보전 전략과 그 수행방법.” 『군사논단』. 제67권, 2011.
- 박민우 외. “생물무기 특성과 사례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제13권 4호, 2017.
- 박병광. “국제질서 변환과 전략적 각축기의 미중관계.” 『국방연구』. 제57권 1호, 2014.
- \_\_\_\_\_.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방향.” 『INSS 전략보고』. 67호, 2020.
- 박용환. “북한군 특수전부대 위협 평가.” 『국방연구』. 제58권 2호, 2015.
- 박재완. “생물학전 및 생물테러 대응태세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 『합동화생방기술정보』. 2005-4호, 2005.
- 방진희. “아시아의 잠수함 전력.” 『국방과 기술』. 2003년 1월호, 2003.
- 박창희.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국방정책연구』. 제24권 1호, 2008.
- 서정경. “미중 전략적 경쟁시기 아시아의 선택은?: ‘아시아-중국대화 2021’에 나타난 각국의 입장.” 『아시아 브리프』. 제2권 8호, 2022.
- 송세관. “북한 군사전략의 변화와 한국군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군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 송재익. “한국군 합동 사이버작전 강화방안 연구: 합동작전과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군사』. 2호, 2017.
- 안성배. “2022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22권 8호, 2022.
- 양문수. “기획특집\_광복, 분단 70년 그리고 통일: 분단 이후 남북한 경제의 궤적.” 『현대사광장』. 제5권, 2017.
- 육중관·황수진·김태구. “다세대 교전 효과도에 있어서 각 요소 성능의 영향력 연구: 장사정포 요격체계 시뮬레이션.” 『한국시뮬레이션학회 논문지』. 제29권 3호, 2020.
- 오테곤. “뉴테러리즘 시대 북한테러리즘에 관한 공법적 검토.” 『법학연구』. 제21권, 2006.
- 이유진. “미-중 무역전쟁 4년 경과 및 전망: 양국 무역비중 및 탈동조화 검토.” 『KITA 통상리포트』. 8호, 2022.
- 이재은. “국가안보 환경의 변화와 국가위기관리: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위기 유형.”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2호, 2013.
- .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 위기관리 법제화의 의의와 내용 분석.” 『Crisisonomy』. 제2권 2호, 2006.
- 이헌경. “북한의 테러동향과 미국의 대테러 대북전략.” 『북한연구학회보』. 제7권 1호, 2003.
- 정준호. “국가안보개념의 변천에 관한 연구.” 『국방연구』. 제35권 2호, 1992.
- 최선만.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최용성. “게릴라전 양상의 변화과정 고찰.” 『전사』. 제6호, 2004.
- 황순필. “김정은 정권의 군사전략 변화 연구.”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International Crisis Group. “North Korea’s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Programs.” *Asia Report*. no. 167, 2009.

Lambakis, Steven J.. “Reconsidering Asymmetric Warfare.” *Joint Forces Quarterly*. vol. 36, February 2, 2005.

Mack, Andrew. "Why Big Nations Lose Small Wars: The Politics of Asymmetric Conflict." *World Politics*. vol. 27, no. 2, 1976.

Meigs, Montgomery. "Unorthodox Thoughts about Asymmetric Warfare." *Parameters*. vol. 33, no. 2, 2003.

National Defense Panel. "Transforming Defense: National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Joint Force Quarterly*. Summer, 1997.

### 3. 기타 자료

『노동신문』, 『서울신문』,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자유아시아방송』,  
『조선노동TV』, 『조선일보』, 『조선중앙통신』, 『한국일보』, 『KTV  
국민방송』, 『MBC』, 『SBS』.

*BBC, BreakNews, NPR, VOA.*

국민재난안전포털 <m.safekorea.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main.do>.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www/main.do>.

외교부 <dnk.mofa.go.kr/www/main.do>.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www.belfercenter.org/>.

Bookmap <bookmap.com>.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www.epa.gov/>.

Federal Register <www.federalregister.gov>.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www.iiss.org/>.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ww.imf.org>.

ITWorld <www.itworld.co.kr/main/>

The White House <www.whitehouse.gov/>.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gov>.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www.scio.gov.cn>.

2018년 육군교육사 군사학술연구용역 (2018.12.31.).



2020년 행정안전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20.12.31.).

「폭발물처리 훈령」(제정 2010. 12. 27. 국방부훈령, 2018. 1. 24. 일부개정)

제3조 별표.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내용 (2022.12.8.).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내용 (2022.12.12.).

연구보고서

2020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            |                                              |         |
|------------|----------------------------------------------|---------|
| 2020-01    | 평화경제 실현방안: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 김석진·홍제한 |
| 2020-02    | 남북한 주민 왕래 및 이주와 혼인에 관한 법적 연구                 | 이규창·문선혜 |
| 2020-03    |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 김수암 외   |
| 2020-04    |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 홍석훈 외   |
| 2020-05    | 중·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                            | 현승수 외   |
| 2020-06    | 한반도 평화변영과 북일관계 연구                            | 이기태 외   |
| 2020-07    |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정치적 배경과 법적 기반 분석                | 민태은 외   |
| 2020-08    | 남북기본합정 체결방향과 과제                              | 도경욱 외   |
| 2020-09    | 남북연합 구상과 추진방안                                | 이무철 외   |
| 2020-10    | 새로운 한반도 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 김갑식 외   |
| 2020-11    | 평화공감대 확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 박주화 외   |
| 2020-12    |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 정성윤 외   |
| 2020-13    |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 정은이 외   |
| 2020-14    |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 나용우 외   |
| 2020-15    | 해외의 시각으로 본 신남방·신북방정책의 평가와 과제                 | 나용우 외   |
| 2020-16    |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 박주화 외   |
| 2020-16-01 |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 박주화     |
| 2020-16-02 |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 박주화     |
| 2020-17    |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박주화 외   |
| 2020-18    | 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 남북 육상·해양협력을 중심으로             | 서보혁 외   |
| 2020-19    | 국제 평화경제 사례와 한반도                              | 조한범 외   |
| 2020-20    |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 홍 민 외   |
| 2020-21    | 강대국 경쟁과 관련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 신종호 외   |
| 2020-22    |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 홍제한 외   |
| 2020-23    | 체제전환 과정에서 인구구조 변화 연구                         | 최장호 외   |
| 2020-24    |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 조정아 외   |
| 2020-25    | KINU 통일외식조사 2020: 주변국 인식 비교연구                | 이상신 외   |
| 2020-26    |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과 부문별 정책 변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담화·연설 분석 | 오경섭 외   |

## ■ 정책연구시리즈 ■

|         |                               |       |
|---------|-------------------------------|-------|
| 2020-01 |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인도협력           | 이규창 외 |
| 2020-02 |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분석과 국내외 정책 전망 | 민태은 외 |

## ■ Study Series ■

|         |                                                                                                                                                                             |
|---------|-----------------------------------------------------------------------------------------------------------------------------------------------------------------------------|
| 2020-01 |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Legal Issues and Challenges<br>Do, Kyung-ok·Ahn, Jun-hyeong                                                                    |
| 2020-02 | Variables and Pathways of Changes in North Korea:<br>Focused on Different Combination of 'Nuclear Issues' and 'Reform·Opening'<br>Park, Young-Ja·Jeong, Eun Mee·Han, Ki Bum |
| 2020-03 | Daily Lives of North Korean Women and Gender Politics<br>Cho, Jeong-ah·Yee, Ji Sun·Yi, Hee Young                                                                            |
| 2020-04 | 2019 Annual Reports of Attitude of Koreans toward Peace and Reconciliation<br>Park, Juhwa et al.                                                                            |

## 2021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         |                                                  |         |
|---------|--------------------------------------------------|---------|
| 2021-01 | 남북 민생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 김석진·홍제환 |
| 2021-02 |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 최규빈 외   |
| 2021-03 | 국가상징의 문화적 형상과 북한의 브랜드 전략                         | 이지순 외   |
| 2021-04 |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                               | 김수암 외   |
| 2021-05 |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 이우태 외   |
| 2021-06 |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 민태은 외   |
| 2021-07 |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 전병곤 외   |
| 2021-08 |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비전통 안보 협력                         | 이재영 외   |
| 2021-09 | 국제협력 성패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                           | 정성윤     |
| 2021-10 |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 정은미 외   |
| 2021-11 |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 오경섭 외   |
| 2021-12 |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 김진하 외   |
| 2021-13 |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 홍제환·김석진 |
| 2021-14 |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와 통제를 중심으로                    | 정은미 외   |
| 2021-15 | KINU 통일인식조사 2021: 통일·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 이상진 외   |
| 2021-16 |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 황수환 외   |
| 2021-17 |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 나용우 외   |

|            |                                                    |       |
|------------|----------------------------------------------------|-------|
| 2021-18    | 남북 접경지역 재해·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전이공간(TSDP)' 조성방안 기본 연구 | 김형수 외 |
| 2021-19    |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 여성과 섹슈얼리티                      | 박영자 외 |
| 2021-20    |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모성과 양육                        | 이윤진 외 |
| 2021-21    |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 서보혁 외 |
| 2021-22    |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 신종호 외 |
| 2021-23    |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 이기태 외 |
| 2021-24    |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민국 협력 방안                          | 최희식 외 |
| 2021-25    | 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                                   | 박은주 외 |
| 2021-26    |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 이재영 외 |
| 2021-27    |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 장철운 외 |
| 2021-28    |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 최지영 외 |
| 2021-29    |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 최지영 외 |
| 2021-30    |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 김갑식 외 |
| 2021-31-01 | 평화공감대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 박주화 외 |
| 2021-31-02 |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 박주화 외 |
| 2021-32    |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 이무철 외 |
| 2021-33    |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 정은이 외 |
| 2021-34    |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 조한범 외 |

### ■ 정책연구시리즈 ■

|         |                                                |         |
|---------|------------------------------------------------|---------|
| 2021-01 | 2020년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 이상신 외   |
| 2021-02 | 북한의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공간전략 탐색: 접경지역 산림특구안을 중심으로 | 황진태·백일순 |
| 2021-03 | 한중 보건 협력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성화 방안               | 황태연     |
| 2021-04 | 통일공공외교 수요조사                                    | 이상신·이재원 |

### ■ Study Series ■

|         |                                                                                                   |                                          |
|---------|---------------------------------------------------------------------------------------------------|------------------------------------------|
| 2021-01 |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Suk-Jin Kim                              |
| 2021-02 | North Korea's Income-Population Puzzle                                                            | Jea Hwan Hong·Suk-Jin Kim                |
| 2021-03 | North Korea's College and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in an 'Era of Knowledge Economy' | Jeong-ah Cho·Choon Geun Lee·Hyun-suk Oum |
| 2021-04 | A Study on the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 Soo-Am Kim et al.                        |

## 2022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         |                                                     |         |
|---------|-----------------------------------------------------|---------|
| 2022-01 |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 이규창 외   |
| 2022-02 | 북한 국영기업 현대화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 김석진·홍제환 |
| 2022-03 | 북한 게임의 문화융합: 게임산업, 콘텐츠, 경험                          | 이지순·최선경 |
| 2022-04 | 북한의 SDGs 이행 현황 및 지표 분석                              | 최규빈 외   |
| 2022-05 | 해외사재를 통해 본 남북 접경협력의 추진 방향과 전략                       | 나용우 외   |
| 2022-06 | 2022 접경지역주민 인식조사                                    | 나용우·이우태 |
| 2022-07 |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북한의 새로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 정은이·이해정 |
| 2022-08 | 북한의 중산층                                             | 정은미 외   |
| 2022-09 |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 민태은·박동준 |
| 2022-10 |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국제사회의 대북협력                            | 황수환·권재범 |
| 2022-11 | 체제전환국 국가·종교 관계와 북한에 대한 합의                           | 현승수 외   |
| 2022-12 |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 조한범 외   |
| 2022-13 |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 변화와 평화·비핵 체제 모색                         | 김상기 외   |
| 2022-14 |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과 협력 모색                       | 이무철 외   |
| 2022-15 | 포스트-코로나 시대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안보 협력                      | 장철운 외   |
| 2022-16 | 북핵 도전요인과 국제협력                                       | 정성윤 외   |
| 2022-17 |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제도적 문제: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 도경옥 외   |
| 2022-18 |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평화·번영                          | 이재영 외   |
| 2022-19 | 발전의 평화·인권 효과와 한반도                                   | 서보혁 외   |
| 2022-20 | KINU 통일인식조사 2022                                    | 박주화 외   |
| 2022-21 | 팬데믹 시대 정책 환경 변화와 북한의 대응                             | 황진태 외   |
| 2022-22 |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미중 경쟁구도의 전개와 북한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 김진하 외   |
| 2022-23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 최지영 외   |
| 2022-24 |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 홍 민     |
| 2022-25 | 북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구상: 해외 사례와 시사점                     | 홍제환 외   |
| 2022-26 | 미중 전략경쟁시대 한국의 복합대응전략                                | 김갑식 외   |
| 2022-27 |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 이론과 방법론                    | 박영자 외   |
| 2022-28 |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 홍 민 외   |

### ■ 정책연구시리즈 ■

|         |                                     |       |
|---------|-------------------------------------|-------|
| 2022-01 | 중국 20차 당 대회 분석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 전병국 외 |
| 2022-02 | 동아시아 다중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 | 박은주   |
| 2022-03 | 2022년 미국 중간선거와 정당별 정책 전망            | 민태은 외 |

|         |                            |       |
|---------|----------------------------|-------|
| 2022-04 |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국정과제 추진방향 | 한동호 외 |
| 2022-05 | 북한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론과 대북안전보장 방안  | 홍 민 외 |

## ■ Study Series ■

|         |                                                                                                  |                         |
|---------|--------------------------------------------------------------------------------------------------|-------------------------|
| 2022-01 | An Assessment of the Last Decade of the Kim Jong-un Regime                                       | Hyeong-Jung Park et al. |
| 2022-02 | The Cultural Meaning of North Korea's National Symbols and Its Branding Strategy                 | Ji Sun Yee et al.       |
| 2022-03 | The Restructuring of the World Order and a New Korean Peninsula System                           | Eun Joo Park et al.     |
| 2022-04 | The Arms Race and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 Cheol-wun Jang et al.   |
| 2022-05 | Exploring Inter-Korean Cooperation for the Formation of a Life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 Ji Young Choi et al.    |

## KINU Insight

|         |                                             |       |
|---------|---------------------------------------------|-------|
| 2020-01 |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과 정세 전망           | 홍 민 외 |
| 2020-02 | 평화의 경제적 가치: 2018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 장철운   |
| 2020-03 | 미국의 對적성국 관계정상화 프로세스와 대북정책                   | 김유철   |
| 2020-04 |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북중무역 감소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 최지영   |
| 2021-01 |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 홍 민 외 |
| 2021-02 |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 홍 민 외 |
| 2021-03 |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추세, 특징, 시사점 | 최지영   |
| 2022-01 | 김정은 시대의 북한: 10년 평가와 2022년도 전망               | 홍제환 외 |
| 2022-02 | 2022 북핵 도전요인 전문가 인식조사                       | 정성윤 외 |

## 북한인권백서

|                                                 |       |
|-------------------------------------------------|-------|
| 북한인권백서 2020                                     | 이규창 외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0 | 이규창 외 |
| 북한인권백서 2021                                     | 오경섭 외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 오경섭 외 |
| 북한인권백서 2022                                     | 이우태 외 |

## 연례정세보고서

|      |                |       |
|------|----------------|-------|
| 2020 | 2021 한반도 정세 전망 | 통일연구원 |
| 2021 | 2022 한반도 정세 전망 | 통일연구원 |
| 2022 | 2023 한반도 정세 전망 | 통일연구원 |

## 정기간행물

|                                                                                    |
|------------------------------------------------------------------------------------|
| 통일정책연구, 제29권 1호 (2020)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1 (2020) |
| 통일정책연구, 제29권 2호 (2020)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2 (2020) |
| 통일정책연구, 제30권 1호 (2021)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30, No. 1 (2021) |
|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 (2021)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30, No. 2 (2021) |
| 통일정책연구, 제31권 1호 (2022)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31, No. 1 (2022) |
| 통일정책연구, 제31권 2호 (2022)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31, No. 2 (2022) |

## 기 타

|      |                                                     |            |
|------|-----------------------------------------------------|------------|
| 2020 | 동서 화해사상으로 본 통일공동체의 상과 과제                            | 김범수 외      |
| 2020 | DMZ 접경지역의 비평화 실태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 전략촌을 중심으로             | 정근식 외      |
| 2021 |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 서보혁·용혜민 엮음 |
| 2022 | 2022 KINU 북한도시포럼 발표집: 「육망의 모노리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도시변화」 | 홍 민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                                  |                        |          |          |
|----------------------------------|------------------------|----------|----------|
| 신청자 성명*<br>(입금자가 다를 경우<br>별도 표기) | 소 속*                   |          |          |
| 간 행 물*<br>받 을 주 소                |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가입必 |          |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 이메일 서비스                          | 수신 ( )                 |          | 수신거부 ( ) |
| 회 원 구 분*                         | 학생회원 ( )               | 일반회원 ( ) | 기관회원 ( )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                        |          |          |
| 20    년                          | 월                      | 일        | 성 명 (인)  |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위탁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시회원 서비스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회원자격 갱신 시 보유기간은 1년 연장)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5.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고지사항)

|                |              |
|----------------|--------------|
| 위탁 받는 업체(수탁업체) | 업무내용         |
| (주) 코리아디엠      | 발간물 발송 업무 처리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부임 임명 서명 (인)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  |
|----|--|-----|--|
| 동의 |  | 미동의 |  |
|----|--|-----|--|

—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시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 동아시아 다중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